

## 200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포럼

- 일시 : 2007년 2월 26일(월) 12시 ~ 27일(화), 1박 2일
- 장소 : 만해NGO교육센터, 성 베네딕토 피정의 집
- 주제 : 2007 시민사회 현황과 과제

### ● 제1세션

- 제목 : <심층토론> 한국사회 진단과 시민운동의 과제 1  
- 시민운동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 -

취지 :

- 한국사회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시민사회에 제기하는 새로운 운동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안을 듣고 토론한다.
- 다양하게 시도되는 경험과 고민을 중심으로 우리 운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공동의 발전전망을 찾는다.
- 이 토론은 결론의 도출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 시민운동의 활동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려는 것으로 한다.

내용 :

발제 1) '풀뿌리가 희망이다.'

/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발제 2)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

/ 박래균 인권운동사랑방

발제 3) 시민운동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 박병욱 경실련 사무총장

진행방식

- 발제는 각 30분 배정한다.
- 토론은 사회자가 쟁점을 정리하여 참가자 전체가 토론한다.

### ● 제2세션

- 제 목 : <심층토론> 한국사회 진단과 시민운동의 과제 2  
- 영역별 운동의 현황과 과제 -

취지

지역 및 각 운동 영역별 운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운동 영역에서 제기되 는 이

슈 및 시민운동 전체가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한다.

**내용**

**발제 1) 지역운동의 현황과 과제**

/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발제 2) 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

/ 섭외 중

**발제 3) 환경운동의 현황과 과제**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발제 4) 평화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진행방식**

- 각 부문과 영역별 15분 발제
- 질의 응답 및 전체 토론

**● 제3세션**

**제목 : 2007 대선과 한국 사회전망**

- 시민사회 공동대응 방향 모색을 위해 -

**취지 :**

- 대선시기 시민운동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운동 내 부문별 대응방식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 발전전망을 논의하고,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관한 방향을 토론한다.

**내용 :**

**발제 1) 한국사회의 발전 전망 2007년 대선시기 사회운동의 과제**

/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섭외 중)

**발제 2) 2007 대선과 시민운동의 대응을 위한 제안**

/ 서주원 환경교육센터 소장

**진행방식**

- 정책포럼 기획위원들을 포함하여 각 부문 및 지역이 발제문을 사전 검토하여 토론을 준비 하되, 참가자 전원이 함께 토론하도록 한다.

## 200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포럼 프로그램 안내

- 1) 일시 : 2007년 2월 26일(월) 12시 ~ 27일(화) 11시
- 2) 장소 : 만해NGO교육센터, 성 베네딕토 피정의 집
- 3) 주제 : 2007년 시민사회 현황과 과제

날짜	시간	순서	내용	
2월26일	13:00 ~ 14:100	정책포럼 < 제 1 세 션>	한국사회진단과 시민운동의 과제1- - 시민운동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 발제1) '풀뿌리가 희망이다.'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발제2)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발제3) 시민운동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사 회 민만기
	14:15~15:30		전체 토론	
	15:40~ 16:00	Networking		
	16:00 ~ 17:30	정기총회	2007년 연대회의 정기총회	
	18:00 ~ 19:00	저녁		
	19:30 ~ 20 :30	정책포럼 < 제 2 세 션>	한국사회진단과 시민운동의 과제2 -영역별 운동의 현황과 과제 - 발제 1) 지역운동의 현황과 과제 /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발제 2) 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 / 섭외 중 발제 3) 환경운동의 현황과 과제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발제 4) 평화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 회 김제선
	20:30~21:30		전체 토론	
	21:30~21:5	Networking		

	0			
	21:50~23:50	정책포럼 < 제 3 세션 >	<p>2007 대선과 한국사회 전망</p> <p>- 시민사회 공동대응 방향 찾기 -</p> <p>발제 1) 한국사회의 발전 전망 2007년 대선 시기 사회운동의 과제</p> <p>/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섭외중)</p> <p>발제 2) 2007 대선과 시민운동의 대응을 위한 제안</p> <p>/ 서주원 환경교육센터 소장</p>	사회 전성환
2월27일	9:00 ~ 11:00	종합토론 및 폐회		

## 한국 시민단체가 나아갈 방향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성

박 병욱(경실련 사무총장)

###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지난 20여 년간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시민단체들은 대단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 이후, 특히 참여정부가 등장한 이후 시민단체들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그에 비례하여 심각한 사회적 비판과 지지기반의 감소라는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다. 정파적 편향성, 정치과잉, 비전문성, 일방주의 등의 개념들이 시민운동을 수식하는 말로 언론지상에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이런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아울러 내부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개선되지 않는 재정적 어려움, 점점 약화되는 인적 역량, 경영역량의 부족 등은 시민운동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들은 근본적으로 시민운동의 태동기인 1987년 6월 항쟁 이후 20여 년간 우리사회에서 진행된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아무런 질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기존의 낡은 시민운동 패러다임 간의 불일치와 충돌에 기인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

첫째로 시민단체와 정책성향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정당과의 연대 혹은 제휴를 통해 보수정당을 고립시키고 사회적 진보를 성취하려는 고전적 연대운동 모델이 시민운동의 정파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기능했다.

둘째, 도덕적 우위에 기반한 심판자(judge)적 역할모델은 과도한 자기옳음(self-righteousness)의 오류로 나아가 이분법적 흑백논리와 피(彼) - 아(我) 구분, 비타협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운동방식의 채택을 가져왔다.

셋째, 우리사회가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급속히 다양화, 다원화, 이해관계집단의 조직화 및 정치화가 이뤄지면서 ‘다양성의 존중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일치와 단결, 비타협적 투쟁’이 여전히 시민운동을 관통하는 가치로 유지되면서 시민단체는 사회적으로 ‘경직’된 ‘갈등당사자’로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전문성이 부족한 집단’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넷째, 정치적으로 과소대변되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을 본질적인 사명으로 하는 애드보커시 NGO에게 있어 이들의 권리와 이익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권익에 대한 대변은 사회전체의 편익 증진의 관점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민주화가 진척됨에 따라 노동자, 농민 등 제 집단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상당 수준의 정치적 역량과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들이 요구 또한 ‘억압되었던 보편적 권리의 회복과 생존권 등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내용을 넘어서서

보다 직접적인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은 과거 이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데에 집중했던 방식을 탈피하여, 사회 전체적 편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중재하는 등 대변활동의 방식을 바꾸는 변화가 필요했지만 여전히 과거방식을 답습하거나 소극적 동조에 그침으로써 오히려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다섯째, 언론 등을 통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이를 증대된 영향력에 수반되는 공적 감시로 인식하고 수용하지 않고 이념적 및 정치적 시각에서만 해석하고 ‘저항·방어’모드로 대응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은 타 집단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는 무책임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초래했다.

여섯째, 200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우리사회에 정치적 서포터스 운동이 시민단체의 형식을 띠고 등장했고, 이후 이념적으로 매우 상이한 다양한 그룹들이 대거 등장하였으며, 네티즌 중심으로 자발적인 대중운동이 일어나는 등 시민단체 영역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로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었고, 이러한 혼란은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정치적 서포터스 단체들을 시민단체와 분리하여 정립하는 등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키려는 진지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운동방법론을 부분적으로 손질한다거나 ‘좀 더 잘해보자’는 식의 도덕적 재무장으로는 극복되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다. 현재 직면한 어려운 현실이 기존의 패러다임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현실의 극복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시민운동에 지배적인 철학과 가치, 방법론이 변화된 현실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한국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민운동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정립해야 한다.

### **정당성과 도덕적 권위의 시대, 합리성과 합법성의 시대, 그리고 책임성의 시대**

1987년 6월 항쟁과 직선제를 통한 노태우정부의 등장 이전까지 한국사회의 정치는 과시즘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다. 군부독재정권은 군부, 경찰, 정보기관 등 물리력을 토대로 사회를 억압하고 통제했으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당시의 사회운동단체들은 체제 바깥에서 말 그대로 ‘사회변혁적인 (재야)운동단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철저히 차단된 상황에서 재야단체들은 시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제도 밖의 공간인 ‘길거리’로 나갔고, 일시적으로 잠깐 열려진 공간을 지키기 위해 돌과 화염병으로 상징되는 대항적 폭력을 사용했다. 상황의 엄중함으로 인해 외부적으로는 ‘비타협성’, 내부적으로는 ‘일치·단결’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다. ‘독재타도와 민주주의’라는 재야단체들의 주장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슈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헌신성 등 ‘도덕적 우위’에 의해 힘입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시민들은 이러한 재야운동단체의 주장과 방식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렇듯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정당성이 재야단체들의 사회적 존립 근거로 작용했다.

6월 항쟁이후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를 민주사회로의 이행기로 볼 수 있다. 정치체제는 점진적이지만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행되었다. 사회운동단체와 일반 시민간의 연로가 열렸고 점차 확대되었다. 사회적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한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거시정책의 개혁’과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억압되었던 사회적 약자 그룹들의 권익 증대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을 가져왔다. 이들은 열려진 의사소통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 활동방식들을 주로 채택했다. 시민들은 과거의 방식과 주장을 고수하던 재야운동단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대안의 합리성’과 ‘방식의 합법성’을 모토로 내세운 시민운동단체들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시민단체들은 제한적이거나 법적으로 활동이 보호받게 되었는데, 국가정책의 수립·집행·평가의 과정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주요한 역할자의 위치에 이르지 못했다.

2000년 이후, 특히 참여정부가 등장한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적 및 절차적 민주주의는 성숙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거시정책적 변화가 진행되었고,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다원화·전문화되면서 사회적 이슈도 훨씬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었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이후 시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격히 증대되었거나, 최소한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었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역할자로 자리매김하였다. 반면 시민단체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불러 일으켰고,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제의 작동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변화로 인해 시민단체는 ‘책임성 증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책임성의 이행은 과거와는 다른 프로페셔널리즘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 애드보커시 NGO로서 재야단체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독재타도 라는 ‘주장의 정당성’과 이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도덕적 권위’를 사회적 존립의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이 시기는 ‘정당성과 도덕적 권위의 시대’로 볼 수 있다. 6월 항쟁 이후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합리적 대안과 합법·평화적 방법론’을 앞세운 시민운동이 태동했고,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급속하게 성장했다. 따라서 ‘합리성과 합법성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숙과 시민단체의 정치·사회적 역할 증대는 시민단체에게 사회적 영향력과 역할에 걸맞는 ‘책임성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도전이며, 따라서 시민단체에게 현 시기는 ‘책임성의 시대’로 다가오고 있다. 시민단체에게 ‘사회적 책임성’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실천적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 II. 왜 사회적 책임이 요청되는가?

1. 시민단체의 양적 증가와 혼란. 1990년대 중반이후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시민단체의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시민단체의 양적 증가는 시민운동 활동영역의 다양화·세분화로 이어져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민주화와 시민참여를 확산시켰으며 점점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공공정책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는 시민단체들의 이질성 확대와 시민단체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요건과 활동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 단체들이 난립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사실상 한사람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고,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무늬만 시민단체 - 사실은 위장된 이익집단 외곽단체’도 존재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후원하는 정치적 서포터스 단체들이 시민단체의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민단체라는 공익적 조직으로서 갖추고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단체 전체의 공신력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시민단체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증대. 1990년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온 시민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이후 급속히 확대되었다. 2002년 대통령선거와 참여정부의 등장은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의 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에 기여했다. 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는 필연적으로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수반했다.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힘도 그 책임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 힘과 책임의 관계가 바로 해당 기관이나 조직의 사회적 책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사회에 거버넌스(Governance)가 확산되면서 시민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키게 되었다.

3. 시민단체에 대한 공적감시(public scrutiny)<sup>1)</sup> 기능 활성화. 그동안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주로 언론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2000년 낙천·낙선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안타까운 점은 낙천낙선운동과 참여정부 등장 이후 우리사회가 정파적 및 이념적 편가르기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몇몇 보수언론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시민단체에 대한 공적 감시’로 인식되기보다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수적 언론의 공격 혹은 정치적 상대진영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시민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책임성’에 대한 자각과 실천은 오히려 지연되었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공신력이 동반하락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언론과 시민단체 모두에게 있다. 그

1)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특정 기관이나 조직이 힘과 책임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 상태를 심각하게 벗어나게 되면 이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사회적 힘이 생겨나게 된다. 시민단체 측면에서 바라보면,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균형을 벗어나게 되면 시민단체를 보다 책임적이고, 사회적 비판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힘이 발생하고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들어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일종의 공적 감시기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언론매체와 학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러나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설혹 이념적 및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시민단체에 대한 공적 감시기능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시민단체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단체는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수언론의 이념적·정치적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활동이 있었을 뿐, 스스로의 책임성을 높여 보다 엄격해진 사회적 기대와 일상적인 공적 감시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진했다.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기반한 공적감시에 대해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대응방안이다.

4. 정부기관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요구. 시민단체는 정부기관을 감시하는 비정부기구로서 정부기관의 투명성과 정책의 책임성을 촉구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성 등을 포함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동’을 전개해 왔다.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자체가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시민단체가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는 수준의 책임성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게 되면 시민단체는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를 가진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5.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과 실제적 성과간의 격차 확대.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의 핵심적 기관들에 대한 기대의 수준과 내용도 변화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 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주장의 정당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1990년대에는 ‘대안의 합리성’과 ‘운동방식의 합법성’으로, 민주화 성숙단계로 볼 수 있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안과 운동방식의 책임성’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은 단계적으로 상승·이동했다.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성과가 이렇듯 높아진 사회적 기대수준을 충족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시민단체의 활동성과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대수준의 상승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회적 기대수준과 시민단체의 실제적 활동성과 간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간격은 시민단체에 대해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기대를 나타내며 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불만과 비판으로 표출된다.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공감은 약화되게 된다.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비판들은 모두 시민단체에 대한 높아진 기대수준과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민단체의 현실적 수준 간의 갭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높아진 사회적 기대수준에 따른 기업비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인 것처럼,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 또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민단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 전략의 의미를 갖는다.

6.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내부적 역량과 조건. 시민단체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내부역량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재정적 여건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으며, 인적 자원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대부분 시민단체 상근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자기계발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매우 미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시민단체의 상근자들의 연간이직률은 20% 안팎에 이를 정도로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상근자 등 내부 멤버들에 대해 책임적이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은 시민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현실이 시민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시민단체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과 개인, 기업 혹은 재단 등의 기부자들에게 얼마나 투명하고 신신했는지, 달리 말해 책임적이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시민단체에 대한 기대수준의 불충족’도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내부의 조직체계와 시스템, 조직문화와 사업풍토 등도 참여하는 임원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얼마나 책임 있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시민단체가 직면해 있는 재정과 인적자원, 조직운영의 문제 또한 임원, 상근자, 자원봉사자 및 회원에 대한 책임성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재구성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민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 Ⅲ. 누구에 대한 책임인가?

NGO의 사회적 책임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와 동일하게 이해관계자 모델을 통해 보다 잘 설명되고 수용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 모델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단체의 정책과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과 개인 - 시민단체의 이해관계자 - 에 대해 책임적이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책임성은 이해관계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위로 향한 책임성(upward responsibility)’으로 시민단체에 재정적 후원을 제공하는 기부자와 재단, 그리고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책임성이다. 둘째는, ‘아래로 향한 책임성(downward responsibility)’으로 시민단체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나, 시민단체에 의해 자신들의 이해가 대변되어지는 피(被)대변집단에 대한 책임성이다. 셋째로는 ‘수평적 책임성(horizontal responsibility)’으로 동료 시민단체들에 대한 책임성이며, 넷째로는 조직의 사명과 가치, 임원과 직원 등 스스로에 대한 ‘안으로의 책임성(inward responsibility)’이다.<sup>2)</sup>

그런데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를 향한 책임적 관계의 크기와 명확성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단체에 대해 가지는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형 NGO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부자와 정부기관과의 책임성 관계가 가장 명료하고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단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부족한 수혜자들과의 책임성 관계는 종종 약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NGO가 창출하는 서비스의 수혜자와 자원제공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인데, 자원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들의 영향력이 단체의 생존과 활동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2)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른 책임성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분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obert Lloyd, The Role of NGO Self-regulation in Increasing Stakeholder Accountability, 2005. & Maura Leen, NGO Accountability: Issues, Lessons and challenges for Dochas and its Members, 2006.

따라서 어떻게 ‘위’와 ‘아래’를 향한 책임성 간에 균형을 맞출 것인가, 달리 말해 아래를 향한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수혜자와의 책임성 관계, 곧 ‘아래로 향한 책임성’은 일반적으로 ‘안으로의 책임성’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NGO들이 수혜자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혜자들이 프로젝트의 결정·집행·평가의 전 과정에 책임있게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도 아래를 향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되는 주요한 방안이다.

에드보커시 NGO인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정 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나, 이처럼 직접적이고 명료하지는 않더라도 중산층들의 후원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다. 피대변집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전체로서의 사회적 편익 측면을 경시하게 되어 이익집단으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불특정 다수인 일반시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에는 회원들의 회비와 민간부문에서의 개인모금을 통해 재정을 충당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즉, 운동의 수혜자와 자원제공자를 일치시킴으로써 ‘위’와 ‘아래’ 간의 책임성 관계를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아래로 향한 책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도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체에 대한 기부자들의 영향력을 분산·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위’와 ‘아래’를 향한 책임성 관계가 동일하게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IV. 무엇에 대한 책임인가?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은 시민단체에 대한 다음의 질문과 관련된 것이다; 에드보커시 NGO인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대변하고자 시민들의 필요(Needs)를 정확·신속하게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가? 또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수용가능(socially acceptable)한 방법으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는 Carroll<sup>3)</sup>이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과 정확히 대칭된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떤 특정한 시점에 사회가 기업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economic), 법적(legal), 윤리적(ethical), 자선적(philanthropic) 기대들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를 실천적이고 경영적 관점에서 다시 쓴다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은 다음의 사항들을 추구해야 하는데,

- 이윤 창출(Make a profit)
- 법률 준수(Obey the law)
- 윤리 경영(Be ethical)
- 선한 기업시민(Be a good corporate citizen)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경제적 책임 + 법적 책임 + 윤리적 책임 + 자선적 책임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Archie B. Carroll, & Ann K. Buchholtz, Business & Society: Ethics and Stakeholder Management, South-Western, a division of Thomson Learning, 2003.

여기에서 이윤 창출이라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은,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 ‘시민들의 필요 충족’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이 법률을 준수하고 윤리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는 법적·윤리적 책임은 시민단체에게 있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의 목적 수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익추구를 본질로 하는 기업에게 있어 ‘공익에의 기여’라는 자선적 책임이 부여되는데, 시민단체에게 공익성은 본질적 요소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은 주로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과 그 목적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내야 할 책임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공공성을 지닌 조직이라면 누구나 요구받는 보편적 책임성과 애드보커시 NGO에만 적용될 수 있는 책임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공익적 조직으로서의 보편적 책임

보편적 책임은 참여단체들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NGO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헌장이나 행동규범들은, △보편적 가치와 원칙의 존중, △NGO로서 요구되는 독립성, 자율성, 자발성, 비당파성 및 공익의 추구, △투명성 및 정보의 공개, △단체의 도덕성, △건전한 의사결정구조, △윤리적 모금 그리고 △전문적 및 효과적 경영과 프로그램 등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체의 유형이나 특성과 무관하게 ‘공익적인 비정부기구’로서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에 해당된다.

이 범주의 책임성과 관련되어 그동안 시민단체에 제기되었던 비판들로는, 시민단체 리더들의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언행, 부적절한 모금관행, 그리고 일회적인 이벤트성 행사 등 단체의 명성과 이미지만을 추구하는 활동패턴 등을 들 수 있다.

### 애드보커시 NGO로서의 책임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책임 위에 애드보커시 NGO로서의 한국 시민단체에 적용되어야 할 책임의 내용구성과 방향설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애드보커시 NGO들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자들이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한국 시민단체들에 해당되는 순수한 애드보커시 NGO들의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헌장이나 행동규범, 나아가 연구와 논의조차 찾아보기 어려워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는 것 또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이뤄진 NGO의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논의와 연구, 실천들은 대부분 서비스 제공형 NGO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국제시민사회에서 이뤄지는 NGO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는 국제NGO(INGO; International NGO)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들은 지난 수 십 년간 제3세계 등지에서 빈곤퇴치, AIDS퇴치 등 소위 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해 온 단체들로, 현장에서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관련 이슈에 대한 애드보커시 역할을 점차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들 또한 서비스제공을 본질로 하면서 부가적으로 단일 혹은 한정된 이슈에 대해 애드보커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국 시민단체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국제NGO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논의도 참고자료 이상의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에드보커시 NGO의 경우, 그 개념조차도 해당 국가의 역사적 및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드보커시 NGO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는 그 사회의 현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가 사회적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비판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으로 출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 논의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현재의 사회적 비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즉, 시민단체가 직면한 비판에 기초하여 어떻게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에드보커시(socially responsible advocacy)'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는 데에서 에드보커시 NGO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시작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책임성 논의의 출발점으로서의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르면, 한국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은 그동안 제기되어진 사회적 비판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그 내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첫째, 시민단체의 정파적 편향성에 관한 것이다. 시민단체 출범 이래 비당파성(non-partisan) 원칙은 시민단체가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져 왔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시민단체들이 특정 정파에 치우친 태도를 취해 왔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시민단체 인사들의 정·관계 진출이나 정부기관 내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의 참여,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각종 선거과정과 대통령탄핵정국 등 민감한 정치상황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특정 정파에 치우쳐 왔다고 시민들이 인식하는 데에 있다.

둘째, 시민단체들이 지나치게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지나치게 정치이슈에 집중한다는 것과 함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슈에 소홀하다는 양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후자의 지적은,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도, 그것을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시민들의 실제적 필요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응성(responsiveness)과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지적이다. 반응성의 문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시민단체 내부참여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간에 간격이 벌어질 때, 그리고 시민과의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효과성의 문제는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의 설정과 그에 따른 내부역량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이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전략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드러난다.

지나치게 정치이슈에 집중한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실제로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의 경우 전체 사업 중에서 정치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특히 정당 간 첨예한 대결국면이 형성된 이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활동들은 시민들의 눈에 잘 드러난다. 특히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실종되고, 정략적 접근이 지배하는 우리사회의 정치현실에서는 비정치적 이슈도 급속하게 정치이슈로 변질되어 정쟁의 소재로 활용된다. 이러한 정치현실을 감안한 보다 사려 깊은 접근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단체들의 일방주의적 운동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어떤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그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일방주의는 자신들이 대변하는 집단의 이해관계나 추구하는 가치에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를 두어, 다른 경쟁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이익이나 사회전체적 편익 혹은 다른 가치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가능한 한 예방하고 해소하려는 갈등해소지향적인 접근방식의 부재 또한 시민단체의 일방주의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넷째, 시민단체들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관한 것인데,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의 크기에 걸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지적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그릇된 운동방식이 전문성에 관한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이슈에 대해 이름걸기식 연대운동을 펼칠 경우, 전문성도 없이 여러 이슈에 대해 얼굴을 내미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운동방식은 시민단체들의 ‘합리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러한 운동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시민단체의 주장과 충돌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들에 의한 ‘시민단체 깎아내리기’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들은 해당 영역에서 자신들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시민단체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하지만, 전문성 자체가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슈의 복잡화, 전문화 추세에 맞춰 어떻게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시민단체의 신뢰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개별 단체의 활동과 영향력의 수준, 활동패턴 등과 연계되어 이뤄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풀뿌리 시민단체와 광역 혹은 국가 단위에서 활동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시민단체에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다섯째,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되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비판들로는 대체로 전제수입에서 차지하는 회비수입의 비중이 낮고, 주요한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반시민들의 참여비중이 낮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수가 적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개별적으로 의미있는 지적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다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회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회원참여’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같은 이슈들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비수입 비중의 크고 작음이 단체의 재정적 독립성과 안정성, 그리고 시민 참여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시민의 있고 없음’을 가르는 핵심적 변수는 아니다. 평범한 일반시민들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만큼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옳은 명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풀뿌리 시민단체와 고도로 전문화된 정책중심의 시민단체에 있어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이 동일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참여와 활동 폭에 대해 언급할 때, 통상적으로 주부, 학생 혹은 은퇴자 등 일반시민들만을 자원봉사자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접근방식 또한 한계를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전문화된 시

민단체들의 경우 전문가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원봉사자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상근자들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시민운동의 본질적 사명은 ‘시민들의 필요를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민감하게 파악하고 대변·충족시켜 주느냐’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에서 ‘시민의 있고 없음’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도 ‘시민의 필요에 제대로 반응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고 있는 가’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적인 프로세스나 기제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회원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시민적 관점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필요가 의사결정과정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기능한다. 또한 충분한 회비수입은 기부자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시민단체가 시민들을 향해 열려 있게 만드는 수단의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회비나 회원 참여 등은 ‘시민들의 필요 충족’이라는 사명의 수행을 돕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관한 비판도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V. 어떻게 사회적 책임성을 높일 것인가?

이러한 사회적 비판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애드보커시 NGO로서의 한국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Carroll은 자신의 삼차원 기업의 사회적 성과모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반응양식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sup>4)</sup>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저항(Reaction)
- 방어(Defence)
- 수용(Accommodation)
- 주도(Proaction)

주도적 양식이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든 시민단체든 그 사회적 반응은 저항 → 방어 → 수용 → 주도적 양식으로 발전하며, 그럴수록 단체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기존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주도적으로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잠재적 의제들을 개발하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의 모형과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리고 무엇보다 솔선수범하여 실천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적절한 비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판으로 그 초점과 관점을 이동시키거나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운동의 실행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교하여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와 실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이다. 첫째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계량화할 수 있어 측정과 평가가 용

4) Carroll, 앞의 책

이한 데 반해 시민단체의 사회적 성과는 본질적으로 가치지향(value-oriented)적이어서 계량화가 불가능하며 측정·평가가 매우 어렵다. 둘째로 목적 수행의 방식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도덕·윤리가 확립되어 있는 데 반해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훨씬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점이다. 기업에게 요구되는 도덕·윤리는 대체로 앞서 언급한 시민단체의 보편적 책임성에 해당되는 것들로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내용들이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의 경우, 이러한 보편적 책임성 위에 ‘특수한 책임성’이 부가되는 데, 이는 전체로서의 사회 및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체계와 깊숙이 연결되는 것이어서 모두가 수긍할만한 명확한 방향과 원칙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

### 자기규제 메카니즘(self-regulatory mechanism) 도입의 필요성

선진국 및 국제시민사회에서 NGO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카니즘들은 다양하다. 이러한 도구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많은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조합을 이뤄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는 자기규제(self-regulation) 메카니즘을 들 수 있다.

자기규제 메카니즘은 NGO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관한 헌장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행동규범(혹은 윤리규범) 등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다. 2006년 상반기에 CIVICUS, ActionAid International, Oxfam International, 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 유력한 11개 국제 NGO들이 참여한 “국제비정부기구 책임성 헌장(International NGO Accountability Charter)”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참여하는 단체들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헌장 혹은 행동규범들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기구들이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규제는 본질적으로 자율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NGO들은 자유롭게 특정한 헌장 혹은 행동규범을 지킬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자율성이, 시민단체들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규제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타당한 비판은 아니다. 자기규제 메카니즘을 채택하는 거의 모든 기구들(Initiatives)이 참가단체들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러 나라에서 개인, 기업, 재단 및 정부를 포함하는 기부자들은 NGO 행동규범에의 참가여부를 그 단체에 대한 기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보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동규범에의 참가 여부가 그 단체의 사회적 평판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회적 이미지와 공신력을 유지 혹은 증대하기를 원하는 단체들은 이에 참여하게 된다. 더욱이 NGO들이 수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활동분야도 다양해지면서 자신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높은 수준의 자기규제 기구(Initiative)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행동규범이 제정되고 NGO들이 이에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NGO의 책임성을 증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행동규범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서명한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행동규범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안을 채택, 이를 이행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기규제 메카니즘 외에 각 단체의 사회적 보고(public reporting) 및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거나 단체활동의 수혜자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단체의 활동과 프로젝트의 계획에서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 의미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프로세스를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사회 감사제(social auditing) 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활용될 수 있다.

## Ⅵ. 글을 맺으며; NGO 사회적 책임 운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기규제 메카니즘은 한국 시민단체들에게도 매우 유효하고 적절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으며, 시급히 채택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의 책임수준에 도달한 단체들이 함께 모여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 운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진국 및 국제시민사회에서의 전개된 ‘NGO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와 실천의 성과를 토대로 한국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시민운동의 역사적 경험 및 특성에 맞게, 무엇보다 현재의 시대정신과 시민적 기대수준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 현장 및 행동규범’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정통한 학계와 함께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의 방향과 핵심적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합의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원하던 그렇지 않은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은 조만간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단체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이 이미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이슈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다. 시민단체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 저항하고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수용하고 주도할 것인가? 선택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은 별로 남아 있지 않다. 모든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책임성’의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너무 늦지 않게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NGO 사회적 책임 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노력과 더불어 사회각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계와 언론 등이 NGO 사회적 책임성에 관해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NGO의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이슈가 시민단체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을 제한하는 규제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시민단체가 처해 있는 열악한 현실을 무시하고 실현불가능하거나 측정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시민단체를 비판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 시민단체의 건전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의 증대를 목표로 필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지속적으로 더욱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 5)

박래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1. 왜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인가?

진보운동의 위기를 진단하는 여러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에 대한 나름의 고민들은 언론매체들에서 제 각각의 방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한 일간지는 아예 '진보개혁의 위기'를 장기간의 시리즈로 기획하여 내보내고 있을 정도다. 진보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진보운동의 위기를 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보운동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감대를 얻어가지 못하고 있다.

언론들을 제외하고 진보운동의 당사자들이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향은 최근에는 민중운동 진영에서 한국진보연대(준)를 결성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전국민중연대가 제기하였고, 논의들이 이어지다가 진보운동진영에서 대체로 민족자주파 운동진영이 결합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가 제기하였던 '단일전선체론'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진보연대(준)는 일단은 이른바 진보운동의 평등파들이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름과는 달리 한 정파의 연대체라는 정도의 인상을 주지만, 이 진보연대는 대중조직들이 모두 결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진보운동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른바 진보운동의 평등파(편의상 진보운동의 좌파와 우파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좌파와 우파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의 제한성과 이미지에서도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서는 편의상 '민족자주파'와 '평등파'로 구분한다.) 내에서도 당장 연합조직을 구성하는 노력들을 경주하는 것보다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진보전략을 만들기 위한 회의체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소들도 진보운동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진보운동의 담론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연구소들은 담론을 형성하여 진보운동진영에 제공하고,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진영은 개별적인 단체나 활동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외부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진보운동에 대한 위기진단은 일부 세력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진보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는 없다.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을 제안하게 된 배경도 현재의 진보운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한 표현이다. 이 새로운 구상이 기존의 진보운동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과 얼마나 차별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보운동진영의 활동가들의 공감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새로운 구상을 제안을 하려면 기존의 진보운동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5) 이 글은 박래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2007년 1월 31일 인터넷언론 참세상에 연재한 것을 저자의 동의를 얻어 발제문으로 내놓습니다.(편집자 주).

우선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매우 구체적인 검토는 일단은 비켜가고자 한다. 다시금 NL-PD의 논의로 돌아갈 수도 없고, NL-PD 구도의 논의에 제한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완전하게 이전의 논의로부터 독립된 제안일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해결 방안은 기존 운동 사회에 몸담고 있는 이들의 고민이라는 한계 속에서 설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대중 조직 중심의 운동 체에서 바라보는 해결방안이거나 노동운동 현장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가들이 바라보는 해결방안이거나 아니면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본 해결책일 것이다. 제안자는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은 이와는 다른 출발점에서부터 운동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야 한다는, 그와는 다른 입각점에 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 이 제안은 무엇이 새롭다는 말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이 제안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제안을 구체화시키는 경로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기존의 논의와는 흐름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제안은 기존의 대중조직에 몸담고 있지 않으면서, 또 시민운동에 몸담고 있지 않으면서 진보운동에 복무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 네트워크에 속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은 기존의 운동의 관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무언가 새로운 흐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소수의 활동가들로, 다양한 현장과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지금은 당장 운동의 주류가 아니지만 진보운동의 올바른 길을 고민하는 활동가들과 진보운동의 내일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이 제안은 그래서 제안자만의 것이 아니라 나름 새로운 운동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과 공유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완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안자가 관심을 갖는 진보운동의 새로운 운동의 흐름을 형성할 주체들은 큰 범주로 구분하여 볼 때 ‘인권, 생태, 여성주의, 평화, 지역’운동의 주체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운동들은 주류 운동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때로는 주류 운동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자체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물론 이 운동 외에도 많은 새롭게 분출하는 운동들이 있겠지만,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할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있는 운동들로 이런 운동들이 눈에 띄었다고 해야 하겠다. 이 운동들이 가진 운동의 지향과 운동의 철학, 운동의 방식들이 서로 간에 검토되거나 한 적은 없다. 각자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진보적인 운동들이 별개의 운동으로 일시적인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럴 때 아직도 노동운동 중심의 사고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기존의 대중운동이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골몰하면서 정책적 대안이나 제시하는 시민운동과 다른 운동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2. 현 시기 진보운동의 상황들

### 1) 민중운동의 상황

1987년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1970, 80년대 진보운동의 전위대 역할을 했던 학생운동은 1996,7년을 경과하면서 몰락한 채 그 위상을 회복할 줄 모르고 있다. 학생운동은

위력적인 대중운동의 주동원력을 형성했고, 진보운동의 활동가들을 배출하는 광범한 저수지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대중 동원력도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활동가들을 배출하는 역할에서도 미미하다. 1970, 80년대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포부조차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수화되는 20대 학생층을 조직해내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다.

학생운동을 이어받아 진보운동의 주력군 역할을 한 것은 노동운동이었다. 노동운동은 전노협을 거쳐서 민주노총으로 합법화되었으며, 현재 가장 많은 진보운동의 동원력을 형성한다. 사실 민주노총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규모 군중집회는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진보운동은 민주노총의 동원력에 기대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은 정파 간의 헤게모니 다툼이 이제는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운동 전체를 비난받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선거에서 어느 정파가 장악할 수 있느냐가 운동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노동현장의 현장조직은 선거를 위해 동원된다. 이미 민주노총이 ‘먹고 살만한’ 노동자들의 이기적 조직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는 오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의 발판 구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 되는 투쟁은 요원하다. 비정규직의 연대 요청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거부해 왔는가는 새삼 사례를 들 필요성도 없어진다. 초기에 사회변혁에 대한 역동성을 가졌던 노동계급의 조직에서 이제는 정규직 대공장 노조의 기득권 조직으로 몰락했다는 비판에다가 채용비리 등 부패한 노조라는 이미지까지 얻었다. 민주노총이 조직하는 총파업은 ‘뽕 파업’이라는 별칭을 얻은 지도 오래되었고, 아무런 위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아우르는 투쟁체가 전국민중연대다. 전국민중연대에는 노동, 농민, 빈민, 학생, 청년 등의 전국 단위의 대중조직들과 사회진보연대, 노힘, 다함께와 같은 좌파 운동조직들도 참가하고 있다. 사실상 큰 단위의 연대투쟁은 전국민중연대가 결의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연대조직은 전국 단위의 대중조직을 장악한 민족자주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곳에 참가한 평등파 단위들은 매번 주도세력과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의견 그룹으로 존재해 왔다. 그렇지만 이런 의견들은 곧잘 전체적인 결정에서는 대체로 밀리게 된다. 전국민중연대는 상설적인 투쟁체로 제시되었고, 실제로 투쟁을 조정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투쟁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이 공투체에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입장과 일정이 절충되고, 조율되어 큰 단위의 대중조직이 제기하는 투쟁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운동의 정치적인 대표체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중운동조직들의 연합적인 질서를 갖는 ‘단일전선체론’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로 민족자주파들이 대거 집결하는 한국진보연대의 결성을 눈앞에 보게 되었다. 아마도 전국민중연대에서 단일전선체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안별로 투쟁에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다 근본적인 투쟁을 전개할 방도는 상실한 채 현안대응적인 투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대중조직들에 포괄된 민중들은 자신들이 속한 대중조직 지도부와 민중연대의 동원 방침에 따라

동원되는 투쟁에 익숙하여 있지만 거둬드는 동원에 피로도가 축적되어 있고, 지도부에 대한 불신도 팽배해 있다. 그러다 보니 관성적인 투쟁으로 매번의 투쟁에서 동원되는 대중들은 투쟁에 대한 기세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주로 집회를 통한 정치적 요구의 표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민중운동은 ‘길 위의(또는 아스팔트 위의) 농사는 잘 지으면서’ 정치적 성과들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못하는 투쟁들을 반복한다.

민중단위들의 요구를 받아서 정치적 성과로 만들어야 할 민주노동당은 아직도 아마추어적인 정치집단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부 정파 간의(언론들조차 자주파와 평등파로 표현하는) 투쟁으로 인해서 17대 총선에서 보여준 대중들의 지지마저도 까먹은 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분명한 자기색깔을 만들어 제시하지 못하고, 보수정당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수적인 열세를 절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들은 전국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을 일상적으로 조직하고 있고, 그런 성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만약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꾸준히 조직해낸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는 무기력한 상층을 대체하는 새로운 운동지도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밑으로부터의 진정한 변화 없이는 민주노동당은 또 하나의 진보정당의 실험으로 끝날 수도 있다.

## 2) 시민운동의 상황

한국의 진보운동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분화가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라는 두 축으로 뚜렷하게 분화된다. 시민운동은 기존의 민중운동을 비판하면서 이들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기존 운동과 차별성을 두게 된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제시하였던 참여민주주의적인 운동을 주도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초기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 사회의 대안세력으로 뚜렷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시민운동에서 2000년 낙선운동을 통해서 경실련이 주도그룹에서 밀려나고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 현재의 구도를 갖추게 된다.

낙선운동을 계기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의 448개 단체를 아우르는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큰 연대조직일 것이다. 이 연대회의는 전국 12개 광역단위별 지역 연대회의가 결성되어 있고, 총회 외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에는 30개 주요 영역단체와 지역연대회의가 참여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주도하는 몇 개의 단체(주요 5단체) 사무총장들이 합의하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요단체들이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소규모 단체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소외받는다. 또 워낙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일치된 인식과 방향을 공유하기 보다는 각자의 활동은 활동대로 가면서(따라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목소리) 전체의 연대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들은 의제 설정능력에서는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 왔다.

한 동안 시민운동은 민중운동을 대체하면서 운동을 선도하는 상황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체제 내 합리적 대안그룹이라는 한계를 갖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민중들의 요구와는 종종 충돌하는 정책을 내게 된다. 지난해에 사회양극화 국민연대는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는 진보운동진영과 명백히 입지가 다름을 확인하여 준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은 시민들을 대리하는 운동, 백

화점식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올 만큼 운동의 한계를 갖고 있고, 각종 사안에 문어발식으로 결합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은 시민운동이 각종 분야의 전문가 그룹들을 포괄하면서(교수와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전문적인 대안창출에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데서 비롯된다. 결국 이런 상황은 일반시민들이 운동의 주체로 서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비롯한 의식 있는 일부 지식인들이 하는 운동으로 인식되게끔 했다.

시민운동에 가장 치명적인 비판은 “시민운동이 마치 정계나 관계진출의 정거장처럼 되어 버린 현실이 시민운동의 위상을 결국 특정 정치집단의 후위대”라는 것일 것이다. 시민운동은 정계나 관계에 진출한 전문가 그룹들과의 인맥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켜가면서(부분적인 정책적 연대) 시민운동의 정치적 위상(이들은 민중운동처럼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성과물들을 쉽게 챙길 수 있었다)은 높아만 갔다.

그렇지만 자유주의 개혁정권들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시민운동의 위력은 그만큼 비례하여 추락하게 되며, 현재의 시민운동은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 하락과 동반하여 사회적인 영향력도 추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운동 내부에서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향후 시민운동의 방향으로 지역에서 성장하는 풀뿌리운동에 주목하자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점은 이후 진보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연결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그렇지만 그런 방향이 탈정치 생활운동으로 전화해갈 가능성이 커서 시민운동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진보를 위한 세력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마도 지금의 시민운동은 이 지점에서 다시 분화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 3) 여타 진보운동의 상황

그렇지만 이런 민중운동진영, 시민운동진영에 포괄되지 않는 운동들이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로 포괄되어 있는 인권운동이 그렇고, 풀뿌리 평화운동 단체들,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단체들, 여성주의, 생태주의 운동, 공동체 운동들이 그렇다. 이런 운동들은 민중운동진영이나 시민운동진영과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도 있지만, 이들은 민중운동이나 시민운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오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들 진보운동들은 나름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운동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한 조직적인 형태도 없이 자신들만의 모임을 만들어서 나름의 운동을 전개하는 곳도 여럿이다. <녹색평론>의 독자모임이라든지 인터넷 상의 수많은 진보 블로그들에 속해 있으면서 자신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한다.

이런 조직이나 모임들은 특징으로는 작은 단체나 모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만큼 독자적인 소통구조를 갖고 있다. 그것이 오프라인 상의 모임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상의 정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운동들을 전개하게 된다. 이런 조직들은 가령 평택투쟁에서 평택범대위의 조직 동원 점검에 잡히지 않는 자발적인 단체이거나 모임들이다.

매우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갖고 움직이므로 어떤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런 운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민중, 시민운동에 포함되기를 거부하면서 기존 운동진영의 권력화되는 모

습을 비판한다. 환경운동에 대한 생태주의 단체들, 여성단체들에 대한 여성주의 단체들, 민중·시민 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연대하는 인권단체 등이 그렇다. 이들은 거대 조직들이 조직적인 결정과 방침에 종속하거나 정치권과의 일정한 타협을 시도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따라서 매우 근본적으로 반인권, 반생태, 반여성, 반평화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반대하면서 대안을 모색하지만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아직은 미미하다. 또 쉽게 자본과 권력에 편입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조직형태도 다양하지만 대체로 기존의 중앙 중심의 조직형태인 민주집중제도 지양한다. 조직적인 결정보다는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참여에 바탕을 두는 이 조직들은 그런 이유로 권위주의에 생래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일쑤다. 그러므로 중앙의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운동방식과는 달리 소통과 논의의 민주성을 강조한다. 이런 운동들은 지루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끌어내게 되지만, 한번 구성원들의 의사가 확인되고 집약되면 활동가들이 결단하게 되므로 나름의 위력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조직이나 모임들이 가장 큰 자산은 지역 내에서 생활 속에 자발적으로 시민들과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어느 운동도 대중화된 운동으로 발전, 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들 운동 중에는 지역 내에 튼튼히 뿌리박고 지역 내에서 교육, 생태,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사회를 바꾸어내고 심지어는 지방토호세력들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지역을 진보적으로 바꾸어내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의 운동에 결합되지 못한 얼마나 많은 진보적인 시민들이 생활공간인 지역에서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은 운동들은 자생적으로 탄생하고, 발전한다. 그렇지만 이들이 갖는 한계도 또한 분명하다. 총체적인 운동이 요구되는 때에 이들 조직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지 못하며, 그럼에 따라 자족적인 운동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운동들이 여타 운동에 영향을 주고, 또는 운동을 주도하는 상황을 만들어가지는 못한다.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이나 대중적인 영향력에서는 상당히 뒤져 있다. 그리고 아직은 각자의 영역 안에서 자신들의 건강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뿐 대사회적인 의제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제안자는 이런 긍정성과 한계를 가진 이른바 ‘여타의 운동’을 주목한다. 이후 ‘새로운 운동’을 제안함에서는 이 ‘여타의 운동’이 가진 가능성에 주목하여 여기로부터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진보운동의 위기는 총체적이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대체적으로 이렇다.

##### (1) 운동의 지나친 정치 권력화 현상

민중운동 조직들은 아직도 80년대식 정파 간의 정치투쟁에 매몰되어 있다. 민주노총이나 민노당에서는 내부의 적과의 투쟁이 조직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정파 간의 투쟁은 서로의 차이에 대한 존중, 토론과 합의, 결정에 대한 승복 등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약점을 갖는다. 조직 내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적인 형식적 민주주의 수준에서 그치므로 대중들의 요구와 이해를 충분히 수렴하려는 태도보다는 자신의 정파가 선거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진다. 이런 조직은 내부 직원들의 이해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운동의 기풍도 세우지 못한다. 가령 민주노총 선거에서 대의원을 누가 더 많이 장악하느냐가 관건이 되므로 자파의 연맹 대의원을 관리해야 하므로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 징계에 회부해야 할 조직을 처내지 못한다. 선거 시기만 되면 투쟁을 도외시한 채(아니면 권력을 잡는 방도로 투쟁을 기획하기도 하면서) 권력을 잡기에 혈안이 된다.

이와는 달리 시민운동은 권력과 지나치게 가까워 있다. 이미 시민운동 출신의 인맥들이 청와대나 정부 부처와 국회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은 운동의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지만, 권력과 분명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은 운동의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권력에 흘러들어간 인사들은 대체로 운동의 이념이나 지향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 (2) 대중과 유리되어 영향력을 상실

진보운동이 대중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는 1980년대 말이었다. 전투적인 행동으로 군사독재 정권을 물리친 과정에서 보여준 헌신성과 치열함은 대중들에게 진보적인 운동(민주화운동)이 희망으로 비쳤다. 그렇지만 이후 운동권 인사들이 대거 정치권에 편입되는 과정과 권력에 합류한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보인 반민중적, 반개혁적인 태도는 이들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무너져 내리게 했고, 그것은 진보운동진영 전체의 위기로 연장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보인 무능력과 보수성, 반개혁성은 곧바로 진보진영의 평가로 돌아왔다.

1990년대 이후 진보운동진영이 얼마나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운동을 끌어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1996년 말과 1997년 초의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2000년의 낙선운동, 2002년의 효순이·미선이 투쟁, 2004년의 탄핵반대운동 등이 그나마 꼽을 수 있는 대중투쟁이지 않았는가.

자유주의 개혁 정치세력들이 진보운동이 제기한 담론들을 정치적으로 각색하여 자신들의 정책으로 내놓고, 이에 대해 어정쩡한 비판적 지지 정도에서 그치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주로 해온 진보운동 진영은 그간의 수많은 투쟁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

민중운동 내의 평등파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노동대중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전파하여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나치게 분열이 심하며, 자신들만의 용어와 논리를 고집하여 대중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 (3) 진보운동의 관성과 경직성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운동 상황도 급한 물살을 형성하면서 변한다. 그렇지만 진보운동은 과거의 관성에 묶여 있다.

운동을 아직도 대중의 정서와는 매우 멀다. 주로 집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는데, 운동권의 친목 단합대회 이상으로 대중들이 결합하는 집회와 시위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걸 당연히 여긴다. 어떻게 하면 대중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대중들의 참여 수준을 높일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하지만, 대중과 유리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집회에서 불리는 노래, 율동, 언어 등도 대중들의 정서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운동의 대중적인 양식의 개발은 너무도 시급하다.

또 시민운동부터 시작된 변형된 집회인 기자회견, 1인 시위의 방식이나 촛불집회, 심지어는 삼



보일배도 이제는 식상한 운동방식이다. 보다 참신한 운동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집회나 시위에 대중들이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보다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조직대중을 동원하여 그들을 주축으로 투쟁을 전개할 때 동원되는 대중들(그들은 전국 집중이나 광역별 집중이다 해서 얼마나 많이 동원되는가, 그러다 보니 조직 중앙의 방침이 먹히지 않는다.)의 피로도는 높아간다. 그 많은 집회에 동원될 때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그 집회의 의미를 제대로나 알고 동원될까. 이런 점들 때문에 조직 내부도 무너져 내린다.

대중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운동, 대중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운동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진보운동의 위상의 추락, 이어지는 소멸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지 않겠는가.

#### (4) 합법주의에 매몰된 운동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집권한 이래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된 상황에서 진보운동은 합법주의 틀에 빠져 있다. 진보운동은 합법과 비합법, 반합법을 넘나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주의의 중병에 빠져 있다. 집회는 경찰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서 신고를 통해서 해야 하고, 뒤로는 타협을 통해서 합법공간을 확보한다. 적극적으로 합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비합법투쟁에는 소홀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가령 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전개하면서 합법과 비합법을 꾸준히 넘나드는 투쟁방식을 기획하여 4년 만에 이동권 관련 입법을 이끌어냈던 것과는 대비된다.

또한 법률과 제도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는 법과 제도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진보운동이 관리되는 상황에 와 있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계급지배에 대한 저항이 대중운동으로 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적극적으로 뛰어넘으려는 운동을 기획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진보진영의 운동들은 대중 집회가 전경 차들의 차벽 안에서 우리만의 집회로 끝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거기에 여론구조나 정치구조가 진보진영을 적극적으로 배제함으로서 아무리 큰 집회라고 해도 정치지형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합법의 틀을 넘으려는, 그 합법이 갖는 지배세력의 위선과 폭력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대중과 함께 분노하고 돌파하려는 운동기획이 요청된다. 정치권력에 의해 관리되는 운동은 역동성을 갖기 어려우며, 대중들과의 차단벽을 그대로 용인한 채 우리만의 운동으로 머물기 십상이다.

#### (5) 진보적인 담론이 없다

1990년대 이후 진보운동진영이 합의한 운동의 담론은 정확하게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1980년대까지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민중민주주의, 사회구성체, 사회성격 논쟁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진보운동진영에서 사라졌다. 오로지 참여연대가 주창했던 참여민주주의 정도가 시민사회에 통용되는 담론이었다. 아니면 강단좌파와 논객들의 논의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논의는 진보운동의 일정한 부분에서만 치열하게 토론되었을 뿐 대중들에게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대중들은 정치권력이 제시하는 담론, 보수진영에서 제시하는 담론(예를 들어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론)에 더 영향을 받았다.

대중들에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운동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못하는 운동은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진보운동의 총체적인 담론이 없으므로 진보운동진영은 총체적인 운동 국면임에도 분절적으로 정세를 인식하거나 사안별로 인식하게 된다. 진보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인식조차 분절성을 넘지 못하므로 운동의 대의와 전망 없이 사안별로 이합집산하는 상황을 반복한다.

그러다 보니 반대의 구호만 난무한 채 대안을 묻는 대중들에게 들려줄 답은 없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이전에는 사회주의라는 대안을 대중들이 인정하던 그렇지 않은 진보운동은 꾸준히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우리의 대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사회주의를 말하고자 한다면 그 사회주의는 무엇인가를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한 ‘여타의 진보운동’은 이런 새로운 운동의 담론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이런 운동들은 서로 간의 대화를 하지도 않고 있다. 진보운동이 자본주의체제의 말기적인 징후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기 위해 생태, 인권, 여성주의, 평화, 지역이라는 화두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면서 진보운동의 이념을 정립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제시하는 일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총체적인 자본의 공격 앞에 진보운동은 무기력하게 공멸하는 운명을 맞거나 매우 위축된 위상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

이와 함께 진보운동의 뚜렷한 지도자가 없거나, 운동의 지도부가 말로만이 아닌 헌신하는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비치기보다는 기회주의적으로 비친다거나 하는 문제들도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사실상 진보운동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일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불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10년은 어떤 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 3. 객관적인 정세는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현실의 진보운동의 위기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그간 진보운동진영이 이룬 성과를 정리하기 보다는 이 제안이 갖는 성격상 주로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했고, 제안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정리하다 보니 정연한 분석은 되지 못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 제안서를 읽는 진보운동에 대해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보완해 주기를 요청한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야 하나 그러기에는 제안자가 마음만 앞서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이어서 진보운동진영이 맞닥뜨리고 있는 객관적인 정세에 대해서 논의해 볼까 한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체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한반도서 전쟁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고, 그에 반해서 보수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중들은 보수진

영의 개발독재적, 민간과시즘적인 보수진영의 주장에 경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보운동 진영은 답답하게도 과거의 낡은 인식과 형식, 조직을 과감하게 깨면서 변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운동은 언제나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새롭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한 운동은 고인 물처럼 썩게 마련이다. 썩지 않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굴러야 하는 것이 진보운동의 고단한 운명이다.

하지만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필요한 이유는 위와 같은 진보운동 진영의 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현재 부닥치고 있는 정세 또는 중장기적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진보운동만이 아닌 새로운 운동의 흐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논의하기 전에 이것을 요구하는 객관적인 정세는 어떤 것인가를 먼저 정리하기로 한다.

#### 1)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총체적인 대결을 요구한다.

말할 것도 없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주된 흐름이 되었다. 한미FTA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은 공공영역까지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민중들이 맞부딪힐 상황은 너무도 암담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극단적인 세계로 우리 사회를 재단한다. 어떤 수식어를 달든 이제 한국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재편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구도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배계급은 분할 통치 방식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피지배계급 내의 분화현상도 나타난다(지배세력은 비정규직 확대 법률과 노사관계 로드맵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노동계급의 이해를 배신하여 정부, 정권 측과 야합하였다.).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요즘의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은 공공성의 파괴, 빈곤의 심화, 빈곤층의 확대로 귀결된다.

한미FTA가 구체화되는 상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결정적으로 구현된다는 의미가 된다. 자본과 권력은 한미FTA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올해만도 20여 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민중들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라도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때 국가의 폭력은 극에 달한다. 이미 권력은 민중들의 생존권적 투쟁에 대해 집중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현재의 국가폭력의 양상은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로 불리기에 충분하다.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에서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권조차도 보장될 수 없는 무권리의 상태로 대부분의 민중들은 강제로 내몰린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일부 계급이나 계층의 문제를 뛰어넘어 전 사회적인 문제로 전화한다. 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항하는 투쟁은 당연히 전사회적인 투쟁이어야 한다. 총체적인 삶의 위기에 맞서는 총체적인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운동세력은 아직은 이런 총체적인 투쟁을 할 만한 전열을 정비하고 있지 못하다. 노동자 계급 중에서 비정규직 투쟁에, 그리고 농민들의 투쟁에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만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사회 진보세력이 공동의 과제로 여기면서 스스로 이 운동에 나설 때 이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 2)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장 전형적으로,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에서 강요되는 곳이 한반도이다. 이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의 선제공격형 전쟁침략기지화를 위한 재배치 구상이 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은 그래서 한 지역만의 문제거나 주민들만의 생존권 투쟁이 아님은 이미 진보운동 세력이라면 인정하고 있는 터이다. MP도 완결 짓지 못하였고, 미군기지의 확장사업도 애초 2008년보다도 무려 5년 이상이나 연장되는 상황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무전리는 육군과 같이 사용하는 주한미군의 종합훈련장으로 확장되고, 직도는 매항리처럼 미군들의 국제사격장으로 선정되어 있고, 제주 화순항은 주한미군의 해군기지로 설정되어 있다. 중국을 겨냥하는 미사일 방어기지(MD)가 서해안벨트로 형성되고(광주 패트리엇 기지가 최근 왜관지역으로 이전됨) 있다.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획득한 주한미군은 평택을 중심으로 언제든 들고나면서 다른 나라에(물론 북한도 여기에 포함) 대한 선제공격이 진행될 수 있다. 한미 간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부터 자주국방을 빌미로 한 미국의 군사장비의 첨단화 요구는 군수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이를 위해서 국방비는 대폭 증액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 위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식 대응으로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 발사실험에 이어서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천명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한반도 남단에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게 되었으며, 일본도 핵무장론을 들먹이면서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횡축에 대항해 중국은 러시아와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종축을 구성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주의적 대결, 긴장은 고조되어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최근 미국언론은 한-미간의 새로운 작계 5029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029는 북한의 공격 없이도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이다.).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을 공격하는 전쟁을 이스라엘을 통한 대리전이든 직접적인 전쟁이든 간에 전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 내에서 미군의 이라크 철군론이 득세하고, 미 의회가 이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미 세계는 달러화 기축통화체제가 무너졌고, 이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 위기는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자본들은 전쟁의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라크에 대한 미군의 증파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이 아니라 재연장을 하면서 위험한 임무를 받으려 하고 있으며, 헤지볼라와 이스라엘이 대결하는 레바논 지역에 군대 파견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부터 한반도(나아가 동북아) 비핵지대화 와 군축, 전략적 유연성 파기, 한미군사동맹 파기 등으로 나아가는 평화운동의 전면화는 절박한 운동과제로 제기된다. 이 운동에는 진보운동진영이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복무해야 한다. 평화를 잃고는 어떤 것도 유지하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연대 운동도 활발해져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 민중들만의 투쟁으로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 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집권 이후 오히려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는 질적으로 후퇴하였다. 이는 87년 6월항쟁 이후 진행된 노동자대투쟁에 대한 민주화운동세력의 불철저한 인식의 연장, 더 나아가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토대를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민주화운동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화운동세력이 자유주의 세력에 너무도 쉽게 정치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민주주의는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에 제한되었으며,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토대는 확보되지 못했다.

자유주의세력은 기존의 보수적 정치세력의 헤게모니에 투항해 들어가서 보수적인 정치권력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배제된 민중들은 정치영역에서 비결정 영역으로 머물게 된다. 이로부터 민중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진보정당이 진입장벽을 넘어서 어렵게 원내에 진출하였다는 것 외에 그에 요구되는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도 없다.

민주화 이후 진보개혁세력이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인권분야와 정치개혁이라는 조사가 있듯이(경향신문 2006. 9. 19) 자유주의 정치세력 이후 많은 권리 영역이 확보된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사회권 분야에서 대대적인 후퇴를 야기했고, 그로부터 가파르게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모든 민주주의 체계도 붕괴시키고 있다. 이제 정치권력은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집중적으로 공격,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드높이고, 경제자유구역을 곳곳에 만들어서 자본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여념이 없다. 정치권력과 함께 입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고, 사법부는 적극적인 계급사법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아 있게 되고, 질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지만, 진보운동진영을 이를 극복할 민주주의 담론을 제시하지 못한다. 일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방안이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잠시 정치권력을 압박했을 뿐이다. 정치영역에서 대중의 진출, 진보정당의 확고한 입지 확보, 사회경제적 토대에서의 민주주의 획득은 아직은 요원하다.

#### 4) 수구진영의 반동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구진영의 반동공세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들 세력들은 ‘잃어버린 10년’을 한탄하면서 2007년 대선에서 반드시 집권하겠다는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 마치 네오콘이 백악관을 장악하기 위해 4년간이나 공을 들였던 것처럼 그들은 그간의 반공주의 집단들만이 아니라 진보운동진영에서 변절해간 뉴라이트 그룹들로 전국적인 연대조직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학생, 노동, 종교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대중들을 공략하고 있고, 실제 대중들은 뉴라이트의 보수공세(그들은 안보와 경제로 단순화해서 대안을 제시한다.)에 방어막을 치지 못한다. 이들의 보수공세가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권세력인 386 정치세력의 무능함과 안보와 경제 불안정성이 한 몫 거들게 된다.

이제 공격 대오를 갖춘 수구보수진영은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친미를 넘는 미국의 대변자 역할을 경쟁적으로 벌이면서 국지전을 불사하고라도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제재를 위한 PSI에의 전면적인 참여를 부르짖기조차 했다. 그것이 불러올 전쟁이라는 비극에 대해서는 굳이 눈을 감고자 했다.

이들의 공세는 권력집단 내에 여전히 뿌리내리고 있는 공안세력들과 연계되어 오히려 집권세력을 고립시키고, 진보운동진영을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으로(지난해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가 증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집시법이나 공무집행방해, 영업방해죄와 같은 악법을 통해 탄압하도록 부추기게 된다. 거기에 수구언론들의 이념공세는 진보운동진영에 대한 총공세 국면을 연출하게 되고, 이들이 주도하는 여론지형에서 항상적으로 진보운동진영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최근의 경향성으로 보아서는 수구집단들이 경쟁적으로 진보운동진영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진보세력에 대한 백색테러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 4. 2007~8년 정치권력재편기에서 진보세력은 무엇을 할까?

이와 같이 전 국가적인, 전 사회적인 위기 국면이 형성되어 있다. 진보운동진영은 이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갈 것인가?

##### 1) 하나의 전선, 두 개의 투쟁

진보운동 진영은 지난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한미FTA 협상 저지 투쟁과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투쟁 등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의 한미동맹의 침략동맹 재편과정은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투쟁이 종합적으로 사고되지 못한 채 미국과 신자유주의 정치권력의 총공세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양상이었다. 이에 따라 사안별 공대위(또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대응을 하였고, 이런 대응은 한미FTA 협상 저지 투쟁만이 일정 정도 대중적인 지지를 획득하였지만 구체적인 정치적인 성과(목표한 협상 중단)로 결실을 맺지는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새롭게 위기국면이 증폭된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6자회담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고, 만약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진행된다면 어느 무엇보다도 전쟁 위기는 고조될 것이고, 한반도의 군사주의적 대결은 강화될 것이므로 이와 연계된 모든 사안에서 국가안보 중심적인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기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에 반대하는 투쟁동력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전선을 정확히 설정하고 이 전선에 운동진영이 총동원되어 할 수 있는 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때만이 그나마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이때 투쟁은 미국이 강요하는 군사주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이제 미국에 대한 투쟁은 공공연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중의 생존권과 공공성을 헌납하는 노무현정권에 반대하는(퇴진 또는 심판 구호는 10%대 지지율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에게 너무 과분한 구호다.)을 중심으로 한 진보운동세력의 총단결 투쟁이 요청된다. 지금처럼 각각의 사안별로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투쟁역량을 집중하지도 못하며, 그렇잖아도 패배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반전시키지도 못한다.

올해는 미국-노무현 반대와 심판이라는 하나의 전선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쇄, 한반도 평화군축 실현이라는 두 개의 투쟁을 중심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2) 정치권력의 재편기와 진보운동진영의 과제

2007, 8년은 대선과 총선이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 진보운동 진영이 주동적인 위치에 서지 않으면 급격하게 보수화된 대중은 민간파시즘이라도 허용하는 상황(개발독재적인)으로 나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며, 사회의 진보는 그만큼 더욱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 기간은 진보와 보수의 사활을 건 운명적 대결이 예견되는 시기다. 한국진보연대(준)이 자신들의 일정과 계획대로 연대체를 건설하여 대중조직들이 일사분란한 대오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한결 역량의 강화에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국면을 주동적으로 헤쳐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진보운동 진영은 대중들을 무엇으로 전취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민주항쟁 20주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이라는 계기점이 저절로 진보운동의 유리한 조건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담론 형성을 위한 경쟁에서 보수진영과 자유주의개혁진영을 넘어 대중에게 진보운동진영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상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 대결을 넘는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주요한 대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대선에서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을 맞자는 의견과 시민운동진영을 중심으로는 민주세력 대동단결론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 논의들이 대중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주지 못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보운동진영의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난해 민중총궐기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농민 대오를 중심으로 일시적인 투쟁역량을 집중한 것 외에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을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내용 면에서도 한미FTA 협상을 중단시키지도 못했으며,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비롯한 평화적인 과제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운동주체들의 인식의 분절화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치적 대격돌기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대중조직 대오를 중심으로 '생태, 인권, 여성주의, 평화, 지역운동'의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결합하고, 그 힘으로 대중들이 투쟁에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조직대중들의 동원된 힘에 의존하는 기획만으로는 정치적 대격돌기에서 힘을 제대로 조직해낼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선에 두 개의 투쟁을 통일시켜야 하며, 그 방식은 기존의 대중동원식 합법주의 집회와 시위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중들 속으로 수시로 파고드는 선전활동과 비합법투쟁 방식으로 기획되는 완강한 불복종운동, 불법시위가 적극적으로 기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는 1999년 시애틀 투쟁을 비롯한 이후 계속되는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 전쟁반대 투쟁의 경험을 알고 있다. 이 투쟁들은 WTO 체제를 파산냈으며,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대여론을 조직해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노조운동, 농민운동과 같은 전통적인 운동의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했기 때문이며, 거기에 다양한 진보운동의 흐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갖고 실천에 임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담장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인 투쟁을 조직해냈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는 이들은 중앙집중의 민주집중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냈다. 세계적 차원의 투쟁에서 가능한 것이 왜 한국에서는 불가능할까? 오히려 조직 범위가 좁으므로 더욱 조직이 쉬움

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때다.

##### 5. '진보운동의 새로운 구상'을 제안한다.

이제 새로운 운동의 흐름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왔다. 이 새로운 운동은 물론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일컫는다.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은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그 방향과 내용은 무엇이고, 조직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구체화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자. 이는 제안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진보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활동가들과 토론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1) 진보운동의 새로운 구상의 가능성과 방향

앞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진보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체나 모임은 주로 '생태, 인권, 여성주의, 평화, 지역' 운동을 하는 단위들이다. 이들 중에서 지역운동은 다른 세 영역과는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생태, 인권, 여성주의, 평화가 진보운동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나뉘는 영역인 반면에 지역운동은 그 안에서 이들 운동들이 구현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지역운동이면서 생태운동일 수 있고, 지역운동이면서 인권운동, 평화운동일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생태, 인권, 여성주의, 평화운동이 지역 풀뿌리 운동과 결합하여(이는 구체적인 생활을 하는 대중과 결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굳건하게 자기 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다르다.

이들 운동들은 개별 영역에서는 주류 운동과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인 운동력을 보여 왔고, 어느 운동들보다 보다 근본적이어서 타협적이지 않다. 생태주의 운동은 성장과 개발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에 반대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인권운동은 민주주의의 기초이면서 원리이기도 하고,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다는 운동적 원칙은 진보운동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 여성주의 운동은 군사적, 가부장적 질서에 반대하면서 젠더에 기초한 다양성, 다름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평화운동은 전쟁, 구조적 폭력, 군사주의에 반대하면서 이를 해체하며 인간의 상호존중을 통한 비폭력적 방식의 운동을 추구한다. 이런 네 영역의 보편적인 가치들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새로운 진보담론을 형성해낼 수 있다. 이들 운동은 현재의 국면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부르는 끔찍한 파국에 대한 가장 치열한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운동들이 서로 간의 대화와 소통을 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이다. 이들 운동이 때로는 만나기도 하지만(새만금에서 생태와 인권이, 평택에서 인권과 평화가,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에서 4자가 연대한다) 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다. 따라서 이들 운동영역 간의 대화와 소통은 꼭 쉽지만은 않다(가령 평화와 인권 간의 대화와 소통은 쉬울 수 있으나, 인권과 생태 간의 대화와 소통은 그리 간단치 않다). 그럼에도 이들 사이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진보담론이 형성될 가능성은 충분하며, 이를 통해서 각각의 운동이 갖는 한계들도 보완될 수 있다. 그래서 각자의 문제의식은 더욱 풍부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질의 진보담론의 형성을 이룰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운동이 갖는 속성상 비폭력 불복종운동과 같은 운동의 저항의 방식은 서로 관통한



다. 비폭력 불복종운동이 부분적으로 실천된 적은 있지만, 이들 운동의 결합에 의해 전면적이고 중심적인 방식으로 사고되고 제시된 적은 없다. 비폭력 불복종운동은 단지 운동의 방식만이 아니라 이들 운동영역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들 운동이 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투쟁이다(물론 이 다음 단계인 저항권의 발동 단계도 포함하여 사고할 수 있다). 이런 운동방식은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고, 대중에게 호소력 있는 실천이 될 것이므로(물론 대중은 쉽게 식상하므로 늘 새로운 운동방식을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안세계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그를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운동들은 이전의 진보운동의 이념과 단절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 기존의 노동해방(자본주의적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념을 통칭해서 말한다.)의 지향을 실현하는 운동이 갖는 역사성과 긍정성을 인정하고 그 위에 이들 보편적 가치들을 녹여내면서 진보운동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노동해방의 지향과 이들 보편적 가치들이 상호침투하면서 재구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진보운동의 역사는 1990년대 이후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자발적인 운동그룹을 성장시켰으며, 이들 운동이 가진 긍정성에 동의하는 대중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새로운 운동은 기존의 진보운동을 부정하지 않는다. 민중운동은 민중운동대로 시민운동은 시민운동대로 자신의 역할과 실천이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대오는 강고하게 계급의식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 반대운동을 완강하게 전개하면 이 새로운 운동은 이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게 된다. 때로는 같은 사안과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을 달리하여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진보운동은 기존의 운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운동을 자극하면서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2) '새로운 운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앞서 민중총궐기 시기에 우선 진보활동가들이 비폭력 비합법운동을 선도적이고 완강하게 전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것은 아무리 새로운 운동이라고 해도 당면한 정세에서 진보운동에 요구되는 투쟁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고, 두 번째로는 그를 통해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을 선전하고 이후를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어떤 경로를 밟아서 새로운 운동의 흐름을 조직할까?

### (1) 제안

민중 총궐기 투쟁 진행 과정에서나 종료 후에 이에 대한 평가 모임과 함께 이후 논의를 제안한다. 제안은 진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개별 활동가들에게 비공개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다. 핵심은 전국에서 생태, 인권, 여성주의, 평화, 지역운동을 고민하는 진보 활

동가들이 이 제안에 얼마나 많이 호응할 수 있느냐이다. 이를 위해서 초기 제안자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민중운동 활동가들이나 시민운동 활동가들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 그들 중에서도 기존의 운동이념이나 운동방식, 운동조직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고 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느끼는 활동가들의 의외로 많이 있다. 진보운동을 새로 세우자 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제안 대상이며, 이후 논의와 실천을 함께 해나갈 사람들이다.

## (2) 한국사회 진보의제 설정하기

조직을 꾸리기 전에 먼저 우리 사회 진보의제 설정을 위한 합의회의를 수차례 개최한다. 각 운동영역별로(소주제로 나누면 훨씬 더 많은 영역으로 분화될 수 있다.) 자신들의 운동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한 논의들을 전개한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합의되는 부분들로 예를 들어 진보적인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100대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매번의 회의에서는 운영자도 호선하여 진행하고, 가장 민주적인 방식의 토론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각자 운동의 장단점을 서로 인식하게 되고,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때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미합의보다는 합의 부분을 존중하는 기풍을 형성하여 향후 네트워크 운영에서도 이 기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정세를 공유하는 외에 누군가 먼저 정리된 진보운동의 이론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다. 각자 자신의 운동에서 실천하면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과제들을 제출하고, 그것을 공통으로 검토하고, 종합해내면 된다고 본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각각의 운동들이 추진해왔던 운동의 과정과 성과들, 논의주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는 기풍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진보운동진영은 외부의 상대와 싸우기 보다는 내부의 상대를 제압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왔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의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지도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그 차이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는 진보의제를 합의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차이로부터 배우고, 그 차이를 자신의 운동에 접목시킴으로서 진보운동의 풍부화와 다양화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 (3)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성

합의회의를 통해서 설정된 진보의제를 대중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에 동의하는 개인과 모임, 단체들에게 제안하여 향후 네트워크를 구성할 준비를 한다. 이 네트워크는 무슨 진보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논의단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과제들을 운동으로 풀어내려는 실천단위임을 분명히 하자. 네트워크에는 연구자, 전문가, 활동가가 모두 자연스럽게 모일 수는 있으나, 이 안에서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원칙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가는 과정이 새로운 운동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형성된 어떤 것에 누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

워기는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만 이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주체성을 최대화할 수 있고, 이 운동을 자기 것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 운동의 주인은 이에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모든 구성원들이다.

이 네트워크에는 개인과 모임, 단체들이 모두 포괄될 수 있어야 하며, 모두는 동일한 자격과 권리를 갖는다. 다만 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해서 소수의 운영단위를 설정한다.

전국적인 단위의 단일한 네트워크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운동을 만들어낼 수 없다.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는 이 네트워크의 근간이 된다. 서울지역의 활동가들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서울을 철저히 지역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중심은 지역이다.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진보의 가치를 실천하고, 추구해야 한다. 대중들을 진보운동에 끌어들이고, 그들이 주체로 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 (4) 운영

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네트워크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회원들에게 진행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소통하는 책임을 진다.

항상적인 소통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며,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들의 정모, 일반회원들까지 참가하는 정모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합의된 운동이나 투쟁은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하여 회원들의 자발적인 제안을 추동한다. 여기서 인터넷은 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이 운동을 조직하고 확장시키는 중요한 매개고리 역할을 한다. 수시로 이 공간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며, 실천이 결의되고, 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대중의 역동성을 자극하는 인터넷을 통한 운동질서를 우리는 이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진보운동의 발전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시기에 당면한 정세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으로 외화하여 실천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책위원회는 정책을 제시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정책위원회는 진보정책 생산을 위해 진보운동 진영의 타 정책 단위들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처음에는 네트워크의 대표는 설정하지 않겠지만, 이후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표를 세우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 대표는 전적으로 대표성을 위임받는 자유위임의 형태는 아니며, 다만 대변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명령위임적인 대표여야 한다.

#### (5) 보완

이후 보다 문제점들을 꾸준히 보완하면서 합의과정을 다시 거쳐 높은 질의 네트워크(다중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간다. 2007년 상반기에는 이 새로운 운동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대중에게 비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기 비폭력불복종운동 과제를 합의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아울러 이 운동과정에서 생기는 벌금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모든 네트워크 참여 단위들에는 운동의 대중화, 지역화를 실천하도록 권유하고, 그에 대한 실천 계획을 공유하도록 한다. 아울러 때 시기 제기되는 투쟁에 조건에 맞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한다. 그럴 경우 기존의 진보운동의 이념을 계승한 새로운 진보담론이 실천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다. 진보담론이 어느 날 똑똑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활동가들의 실천과 성찰 속에서 세워질 것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원리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는 지역주민들과의 또 다른 차원의 네트워크를 촘촘히 형성하여 한국사회의 너무도 다양하고 풍부한 진보운동 진영을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다.

### 3) '새로운 운동' 흐름은 진보운동가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가능하다

모두 진보운동의 위기를 말한다. 그러면서도 진보운동의 위기를 넘기 위한 토론과 실천은 이른바 '새로운 진보운동'의 주체들인 진보운동의 활동가 사이에서는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이 제안자로 하여금 이런 제안 글을 쓰게 만들었다.

사실 새로운 운동에 대한 제안이라 할 것도 없는 것일지 몰라도 어쨌거나 제안자의 짧은 생각으로 이런 방식의 운동 흐름이 형성되고, 실천되어야만 할 때가 왔다 싶었다. 언제까지 각자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는 각자의 좁은 영역 안에 머물면서 사회 전체의 진보를 위한 전망은 남의 손에 맡겨놓을 것인가?

사회의 진보는 진보운동가 전체의 책임이고, 전체가 나눠 가져야 할 운명이다. 이에 대한 대안 또한 같이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진보는 지배자들이 끊임없이 사상누각 안에 가두어 두려는 희망을 현실로 끄집어내는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그 과정은 지배세력에 대한 배신이고, 해방의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과정일 것이다. 이런 민중의 역사를 통해서 재정립된 진보, 모든 주체들이 소외됨 없이 주체로 나서서 만들어가는 진보여야 한다.

지구화 시대의 운동의 특징은 분절적이라는 데 있다고 한다. 지구화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공격에 대해 각자 영역에서의 방어도 힘에 겨운데, 어떻게 단결과 연대를 꾀할 수 있냐는 한탄이 배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은 기성의 운동조직 내에서는 탄생될 수 없다는 것, 전혀 새롭게 출발하여 이만큼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자생력 높은 이 운동들이 연대하고, 소통할 때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정치적 대격돌기에서 우리 사회 진보의제 설정으로부터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위해 나서자. 자신의 좁은 울타리 안에 자신의 열정과 전망을 가두지 말고, 함께 만들어내는 진보의 지향과 실천 속에서 운명을 같이 나눌 때 진보운동은 위기를 넘어 새로운 대안으로 서지 않겠는가.

## 지역운동의 현실과 과제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 1. '시민운동'과'지역운동'

시민운동	지역운동
· 가치지향적	· 정책 지향적
· 담론적	· 실용적
· 대변자, 감시자	· 감시자, 제안자
· 갈등주체, 갈등중재	· 갈등주체(관리), 갈등중재

### 2. 지역의 현실과 문제의식

#### ○ 분권의 함정 vs 시민사회 확장 가능성

- 개발관련 사무이양에 치중하는 등 '관-관 분권' 양상을 띄면서, 지역 토호들이 이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결합, '분권=개발성장'의 제도적 안착을 주도하려고 함.(관료 기득권 지배구조의 제도화)

-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입법화 되고 참여예산제 등 일상적 주민참여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제도자체의 결합과 자치단체의 외면, 시민주체의 준비부족 등으로 제도도입 취지가 형해화되고 오히려 역기능이 부각되는 경향에 있음.

- 지역차원에서 거버넌스의 영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행정의 수동적, 면피적 접근과 시민운동의 제한된 역량으로 생산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

- 한편, 주민참여의 각종 제도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체험과 경로를 통해 제도의 진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이는 늘어나는 풀뿌리 자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와 맞닿아 지역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 문제는 이러한 제도발전과 관련한 민주주의 발전경로가 지역사회의 지배담론과 기득권구조에 대당하는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 ○ 시장주의 개발담론 공고화 vs 시민대안세력화 요구(욕구) 확장

- 민선자치 10년 동안 개발담론은 한국사회 보수화 경향과 맞물려 지배적 위치를 가지게

됨. 이는 민주주의 개혁이 시장개혁(신자유주의 개혁)으로 굴절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근저에 깔고 있음.

- 지역의 입장에서 이는, 적극적 시장개방주의를 펴는 중앙정부에 대응해 지역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규제적 정책에 나서야 하는 지방정부의 딜레마로도 작용하며 정책혼선과 난맥상을 스스로 연출. 향후 이런 문제는 점증하게 될 것으로 보임

ex.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펴면서 FTA 협상품목에서 ‘감귤’을 제외시켜달라는 제주도의 요구

- 따라서, 보편적 시민운동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 지역운동에 있어, 뚜렷한 성과보다 담론과 왜곡된 결과 등으로 전개되는 지역 개발주의에 대한 지역의 대안적 발전담론과 비전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대안세력화의 추진은 미룰 수 없는 고민이 되었음.

### ○ 보편적 개혁의제의 지역화 vs 의제 빈곤

- 우리사회 보편적 화두인 ‘사회양극화’는 지역에도 예외없이 관철되고 있으며, 사회경제개혁은 향후 시민운동의 핵심 과제가 되었음.

- 시장주의적 개발담론이 지배해온 지역 시민사회에서 이는 전국적 수준의 운동에 대한 지역운동의 적극참여를 매개함은 물론, 지역운동의 ‘몰이념성’(?)을 제고하는 ‘살아있는 의제’로서 유용할 뿐 아니라, 시장담론에 대한 대항축으로 공공담론을 현실적 맥락에서 펼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되고 있음.

\*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으로 국민들은 남북관계보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65%)를 꼽고 있음. 아울러, 사회 양극화해법과 관련, 국민들은 ‘일자리(65%)’에 이어 ‘복지 확충(26%)’을 꼽아, 경제정책적 요구가 사회정책 요구로 확대되어지는 경향을 보임 (경향신문 (2006. 9. 7))

- 하지만, 이에 대한 의제접근은 현실적으로 보육, 아동급식 문제 등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뤄지고 있음. 기존의 사회정책 영역이 주로 국가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지역 차원에서는 ‘사회복지’라는 틀 안에서 짜여져 있어, 시민운동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적 개혁의 지평은 협소한 실정.

### ○ 지역운동의 중층적 역할과제 vs 미흡한 주체역량

- 지역운동은 지역사회내에서 보편적 시민세력이라는 일반적 위치를 넘어, ‘의도에 대한 책임’에 더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는 ‘정치실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여기에,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사회의 한 ‘실체’로서 기능해 온 지역시민운동은 이제 지역사회의 갈등조정과 통합이라는 통합적 사회모델에 대한 담지자로서의 역할까지 요구되 어지는 경향에 있음.

- 이에 비해 지역 시민운동 스스로가 처한 상황은 산적한 현실적 과제, 자기전망을 위한 정체성 모색, 전문성과 대중성의 확보 등 시급한 조직적 과제, 지역 운동사회 재구조화 등 지역운동적 과제와 더불어 이러한 ‘지역사회적 요구’에 충실히 부응할 수 있는 정돈된 체제마련에 한계를 보임.

○ **자발적 시민역량 확대 vs 시민운동 네트워크의 경직**

– 시민운동 외의 자발적 행위주체의 확장은 지역사회 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매개로 지속되고 있음

ex. 제주의 경우 주로 제주의 자연, 자녀 양육 등을 매개로 한 시민 활동모임이 주를 형성함

– 이러한 자발적 흐름의 확대는 그 자체로 시민사회 발전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기존 권위주의 체제에 ‘충격’이 되지 않는 못해 개혁요구와 동떨어져 진행 되어짐.

–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자발적 흐름을 어떻게 지역사회 변화의 요인으로 관계맺기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에 견주어 현재의 운동적 네트워크는 이를 수용할만한 유연성이 미숙한 상태임.

**3. 지역운동의 과제**

\* keyword : 대안발전, 자발성 -시민주체, 공공성-민생

**1) 지역사회 발전주체로서의 시민운동 전략**

○ **개발주의 담론과 정책에 대응한 새로운 발전주의 담론 마련**

– 크고 작은 사안을 매개로 지역차원의 시민운동이 전개돼 왔지만, 개발주의라는 큰 흐름에 대별되는 시민운동적 발전담론은 만들어지지 못함

– 적어도 민선 10년 체제에서 지속돼 온 개발주의 정책에 대한 접근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의 공과를 짚어내고, 이의 대안으로서 시민적 발전담론을 마련하는 일이 추진되어야 함.

○ **‘공공성’에 기초한 사회·경제(민생) 개혁**

– 현재의 중앙-지방 정부구도는 분권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시장주의 정책이 지배적 경향에 있고,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과거 개발주의 정책의 문제제기를 일으키는 한편, 보다 현격해진 자치단체 시장주의 정책에 대한 균열구조로서 공공성 확보운동 등을 통해 ‘지방의 논리’를 확보함으로써 ‘중앙정부(시장주의, 개방) - 지방정부(공공성, 규제)’의 긴장구도를 창출.

– 이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경제, 민생과 맞닿아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식의 기존 개발성장주의에 대응해 지역경제의 실물적 관점의 복원을 추구하고, 대형 할인매장 지역화 운동, 매입 임대주택 확대운동,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의 공공성 확보, 분배관점에 입각한 예산감시 운동, 의료 공공성 운동 등 민생과 사회정책분야의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함.

○ **시민사회 - 언론 - 연구소 ‘정책 파이프라인’ 창출**

– 시민사회와 코드를 맞춘 인터넷 신문 등 지역내 언론이 다변화 되는 추세임.

ex. 제주의 경우 4개의 방송사, 3개의 기성 일간지 외에 최근 2~3년 사이, 1개의 종이신문 7개의 인터넷 신문이 생겨났으며, ‘서귀포신문’과 같은 풀뿌리 언론도 있음.

- 반면, 지역사회 담론생산의 주도적 역량을 담당해야 할 지역대학은 이미 그 역할이 사실상 포기되었고, 그 자리를 ‘지역 발전연구원’ 등 관제 연구원이 대신하면서 자치단체의 개발주의 정책의 2차 생산자(가공자)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내 비판적 담론생산과 더불어 시민사회 대안정책을 구성하는 지원역량으로서 시민사회 주도의 연구소 등을 설립, 혹은 강화하고, 언론-연구소-NGO의 유기적 정책연대로 지역사회 대안블럭 형성을 위한 구조기반 마련.

#### ○ 자발적 시민영역과의 적극적 관계맺기

- 분야별 영역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자발적 시민그룹과 프로그램이나 공동사업 등을 통해 관계를 맺어나감. 이는 기존 경직되고 관성화된 시민사회단체 연대구조를 대신할 ‘새로운 연대’의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한편으로, 이는 시민운동이 직면한 생활세계형 대안운동의 요구와 관련, 이를 풀어나가는 해법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 풀뿌리 활동의 저변 확대

- 지역내 ‘소지역’이나 ‘마을’단위로 활동의 공간적 확장을 추구해야 함.

- 이는 외부자본 유치등 자본중심의 지역발전구조를 주민주체의 내생 발전구조로 대체해 나가는 일이기도 하면서, 주민운동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함.

ex. 마을만들기, conet형 주민운동가 양성 등

### 2) 지속가능한 지역운동을 위한 새로운 과제들

#### ○ ‘작고 연속적인 문제들’에 대한 감시활동

- ‘반복’과 ‘비슷한 문제’ 등 지역현안이 보이는 특성과 관련, “10년은 가보자”는 유형의 시민모니터링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음에 따라, 이를 위한 시민감시영역 구축.

ex.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일본의 ‘Limpeace’

#### ○ 거버넌스 혁신

- 각종 행정위원회 참여 정도로 대변되는 거버넌스의 현실을 정책결정의 거버넌스와 공생산(co-production)의 실질효과를 위한 형태로 혁신시켜 나가야 함.

ex. ‘희망스타트’ 운동 등

- 특히,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참여 예산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함. 참여예산제는 다른 일상적 참여제도와 달리 일상적이면서 휘발성이 큰 변화를 몰고올 수 있는 획기적 제도임에도, 이 제도의 도입, 효과 등을 둘러싼 도드라진 과급이 없다는 것은 문제임.

#### ○ 사회통합 의제발굴과 사회적 합의모델 창출

- 정치적 수사로 변질된 지역사회 통합을 의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공론화시켜야 함.

(통합의 원인으로서 ‘갈등’의 잠재적, 구조적 요인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책적 처방)



ex.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참여, 지역 형 생활 최저선 확보 등

- 개혁추동자인 동시에 갈등중재자로서 시민운동의 '위상 충돌'을 현안에 대한 현안해결이라는 목표와 사회적 합의라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활동의 상을 마련해야.

○ '새로운 연대'

- 각종 사안을 매개로 한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관성화 돼 있다는 비판 외로, 더 이상 당위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없는 운동진영 간, 부문운동 간 논쟁점들이 점증하고 있음.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 논쟁이 보장되지 않음.

- 따라서 '운동'적 당위와 조직주의에 경도된 연대운동을 21세기적 가치(생태적 평등, 평화, 사회연대)를 전면화한 네트워크형 연대로 재구조화 하는 문제를 지역운동차원에서 접근.

- 목표에 기반한 공동행동 → 자율성에 기반한 가치의 공유 (가치 연대)
- '느슨함'과 '공고함'을 넘어선 자율과 책임연대 (학습연대)
- 조직화된 단체연대 → 개인의 연대 (활동가 의사네트워크)
- 도덕적 우월주의, 가치일방주의, 획일적 보편주의에서 '겸손한 적극주의'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 정서적 공유를 기반으로 한 블록화 (코드 연대)

## 녹색운동의 현황과 과제<sup>6)</sup>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 ■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의 성장

87년 ‘6월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한국사회는 그토록 열망하던 독재정권을 종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갖고 있었던 획일화된 가치관을 넘어 다양한 가치의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80년대 말 이후 시민운동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성과는 동시에 많은 한계와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6월항쟁으로 형식상의 민주주의는 이루어졌지만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세력들은 정작 민주주의의 내용을 미처 채우지도 못한 채 서둘러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화 운동을 위해 당시에 모였던 역량들이 민주화 이후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내용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는 공간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민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고 앞으로의 운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쳐둔 채 운동의 성과를 고스란히 제도권 보수 정세세력에 넘겨두고 만다. 이는 4.19 이후 또 하나의 미완의 혁명, 미완의 역사를 기록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9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재야라고 불리는 전통개념의 민주화 세력들과 학생운동 세력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시민운동이 자연스럽게 채우게 된다.

이와 같이 시민운동의 등장과 성장은 80년대 분출되었던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개념의 진보운동 세력의 약화와 연관성을 갖는다. 80년대 진보운동은 맑스주의에 기반을 둔 혁명주의가 지배했다면, 6월항쟁을 계기로 민주주의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이전의 혁명주의 운동은 약화되고 시민운동으로 상징되는 경제와 정치개혁문제, 소수자문제, 환경문제, 여성문제, 인권문제 등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나타나게 된다. 민주화 이후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시민운동은 90년대 들어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며, 특히 환경운동은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짧은 시간에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였다.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민주화 이후 기존 진보진영의 약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표출은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필요로 했다.

6) 이 글은 환경과 생명 06년 가을호에 게재된 최승국의 글 ‘새로운 녹색운동의 전망과 과제’와 녹색연합 녹색생명위원회 토론회(06년 11월 29일)에서 발표한 최승국의 글 ‘녹색운동의 전망과 녹색연합의 역할’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용하시려면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대의 흐름과 대중들의 정서를 정확히 읽고 앞서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낙동강 폐놀오염사고로 촉발된 4대강 살리기 운동, 김포수도권매립지 문제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문제로 확산된 폐기물관련 운동, 백두대간 보전운동, 습지보전운동, 동강댐 백지화운동, 대지산 살리기 운동 등은 비록 대부분 특정 이슈를 계기로 시작된 운동이긴 하나 늘 대중들의 정서를 정확히 반영하면서 운동을 수행할 수 있었고 또한 언론보다 한 발짝 앞서가면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었다.

셋째, 언제나 새롭고 창발성이 넘치는 운동방식을 선택했다는 데 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방식은 늘 대중들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신선한 방식이었고 때로는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은 물론 자신들의 의사를 대신 표현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시민단체들에 대한 높은 지지로 나타났다. 90년대 후반은 물론 2천년대 초반까지 시민단체에 대한 지지도는 80%대를 기록했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집단으로 기록되었다.

넷째, 시민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도덕성의 우위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일할 때 시민운동가들은 생활비도 안되는 활동비를 받으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치열하게 현장을 뛰어다니며 문제를 발굴해내는 모습은 시민들의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다섯째, 언론의 협조를 빼놓을 수 없다. 과거 민중운동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가치로 인해 비판의 시각을 갖고 있던 주요 언론들은 90년대 등장한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감을 갖고 적극 보도를 하였다. 주요 신문과 방송들은 환경관련 특집을 만들고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여 환경운동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경문제를 알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언론들의 이러한 태도는 환경운동이 별로 급진성을 갖고 있지도 않아 보였고 자신들의 이익을 해칠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화되는 시기에 새로운 가치를 갖는 기사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경관련 주제들은 좋은 기사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성에서 우위를 갖는 환경단체들의 활동은 시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형식상은 환경문제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환경대통령 선언을, 김대중 대통령은 국책사업인 동강댐과 내린천댐 계획을 백지화하고 수요관리 중심의 물 정책으로의 전환하게 되었으며 새만금 논쟁을 계기로 더 이상의 대형 간척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승승장구하던 시민운동에 일대 전환기가 되는 사건이 총선연대 활동이다. 총선연대 활동은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의 성과가 최대로 발현되는 시기, 시민운동의 최고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의 영향력 약화를 가져오는 직접 계기가 된다. 정치권에 대한 시민단체의 도덕성의 우위와 부패한 정치권의 심판이라는 내용이 시민들의 정서와 일치하면서 총선연

대 활동은 시민들과 언론의 엄청난 관심과 지지로 이어지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총선연대의 승리는 곧 보수진영의 대패를 말하는 것이기에 시민운동에 대한 반대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꼴이 되었다. 먼저 그간 호감을 갖고 있던 언론의 태도가 급변하게 되면서 시민운동의 거품(?)을 빼는 것은 물론 시민운동 흠집 내기에 들어갔다. 이러한 흐름을 등에 업고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각종 보수 진영의 반격이 거세지고 시민운동에 대한 이런 저런 나쁜 선입견을 만들어 가는 작업에 앞장서게 됨은 물론 스스로 시민단체(뉴라이트)를 만들어 기존의 시민운동에 대항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기에 이른다.

결국 화려하게 끝난 총선연대의 활동은 시민사회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하였으며, 총선연대 활동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면서도 환경운동의 자기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환경운동 진영은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 ■ 환경운동의 한계와 문제점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의 눈부신 활동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환경운동 진영은 많은 한계에 부딪히면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제 환경운동 진영이 올바른 운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의 한계와 문제점을 먼저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첫째, 더 이상 시대를 앞서가지도 참신하지도 않다. 90년대 환경운동 진영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앞서가는 운동과제를 발굴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부분에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시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내지도 못하고 있고 대중의 정서를 자극할 참신한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 해묵은 과제를 풀지 못해 대부분의 환경운동진영이 발목이 잡혀있고 운동방식도 천편 일률이다. 성명서나 논평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각 단체 연명으로 집회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농성을 하거나 단식을 하고, 또 3보 1배를 한다. 단식이나 3보 1배와 같은 고행의 운동방식과 수행 방식이 시대를 잘못 만나 혈값에 팔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 단식은 이제 100일을 넘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선택할 가치조차 없게 된 듯하다. 이러한 속에서 환경운동 진영은 한계를 돌파해 나갈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형식의 운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대중들의 공감을 끌어내거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새만금, 천성산, 핵폐기장 등 대형 과제에 눌러 새로운 운동과제를 발굴할 여유를 갖지 못한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환경운동 진영이 시대의 요구를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대응방식(이슈대응 중심) 운동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 진영에 대한 비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반대만 하는 세력, 개발의 발목잡기 등이며 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뒤늦게 끼어들어 뒷북을 치며 사업을 지연시킴으로써 경제발전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시간이 갈수록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는 경기불황과 집값상승 등 사회불안 심리와 맞물려 상승작용을 내며 환경운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논리의 대부분은 개발동맹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이야기이며, 설령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것이 환경진영의 책임이 아니라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사전에 충분한 사회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회 비용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외형상 드러나는 현상만을 놓고 보면 이 같은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기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는 데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있다. 환경운동이 최근 들어 이처럼 어려운 상황과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운동이 지나치게 대응방식의 운동, 즉 이슈대응 중심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실험들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에 모든 운동진영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중앙단위에서 전국의 과제를 놓고 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사회의 근본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한 깊은 고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낱알이 터져 나오는 이슈를 쫓아 다니기에 여념이 없다. 그 결과 우리 운동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담론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하였고 운동 주체를 강화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부분은 정보의 부족 때문이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다보니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문제가 불거지고 이를 환경단체들이 늘 반대만 하는 형식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요즘은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 등으로 인해 계획단계에 최소한의 정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업의 검토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슈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역량이 부족한 탓이다. 각종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그렇고 송파 신도 개발의 경우는 이미 사업이 추진되기 1년 전에 정치성을 띠고 여론화되었으나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고 지난해 사업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번 지방선거 이후 불거져 나오고 있는 ‘대수도론’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에 대해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운동과제와 운동가의 제도화의 영향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자 한다.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환경진영이 선점하고 있던 운동 과제들이 정부나 정치권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이 제도화 되면서 운동의 방향성을 잃은 부분도 적지 않다. 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협치(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우리가 중심의제로 다루어왔던 폐기물문제, 수질문제, 생물종 다양성문제, 에너지문제에 이르기까지 본질은 차치하고 형식상 많은 의제들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고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 운동의 성과로 평가될 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제의 경우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화됨으로써 환경운동진영의 이니셔티브가 사라지게 되고 문제해결에 많은 한계를 낳고 있다. 이는 새로운 아젠다(의제)를 개발해 내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 환경운동 세력의 약화 또는 무기력화를 부추기고 있다.

비슷한 상황으로 운동가의 제도화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직 여성운동이나 일반 시민운동 진영에 비해 환경진영은 그 사례가 많지 않지만 운동가 출신들이 정부 부처나 정치권에 개별로 진출함으로써 운동진영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필자는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해 온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조직화하지 않고 개인의 판단으로 운동의 중심에 있던 이들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은 시민운동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 우려가 있음을 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자기대중이 없고 활동가 중심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0여년 전부터 지겹게 들어온 이야기가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다. 이러한 비판이 정당한가 여부를 떠나 환경진영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임에 분명하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들은 이들을 지지하고 직접 행동하는 자기대중을 기반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여론에 호소하는 운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금처럼 언론이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선 효과있는 운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수가 적은 것은 아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만 합쳐도 10만여명에 이르니 그 규모가 다른 나라의 환경단체에 비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환경이슈에 있어서 운동진영의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는가에 있다. 실제 아직 그 어느 환경단체도 자신들의 회원을 근거로 주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없으며, 또 그럴 수 있는 진성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도 없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아직 후원자의 성격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 ■ 녹색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위한 과제

이제 환경운동 진영이 더 이상 과거의 운동방식을 고집하거나 현실의 한계를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수 없다.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녹색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한 녹색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해 본다.

첫째,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사회를 꿰뚫는 녹색운동의 담론이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다.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녹색세상에 대한 담론, 녹색주의를 정립하는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녹색주의 담론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큰 밑그림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새로 마련하는 그림에는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인간만을 위한 가치가 아닌 모든 생명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담겨야 한다. 또한 국가(정부)와 정치권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녹색경제), 시장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사회를 어떻게 녹색화 할 것인지, 전체 운동진영이 어떤 형식으로 녹색주의의 내용에 합의하고 각 진영간에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은 환경운동 진영의 힘만으로 그려지거나 또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 진보운동 진영 전체가 지혜를 모아 큰 방향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또 그 실천을 위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각자 다른 그림으로, 때로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생각만을 갖고 하는 운동은 결코 큰 성과를 낼 수 없는 법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이 자리를 빌려 진보진영의 정책연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관련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러한 활동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둘째,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한 발짝 앞서가는 운동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를 하더라도 사회의 흐름과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부분에서도 누누이 강조한 바 있고 90년대는 이러한 것이 환경운동진영의 장점으로 작용하여 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며 거침없이 달려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사회와 대중들의 인식은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운동 진영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순간 운동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시민들의 지지는 사라지고 운동의 활기마저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점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맞게 의제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의 최대 현안은 부동산(집값) 문제이며, 지구차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와 에너지 문제이다. 부동산 문제는 다른 모든 아젠다를 압도하고 전국토를 투기와 막개발의 광풍으로 몰고 가고 있다. 결국 부동산발 환경파괴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심각하다. 그런데 환경운동 진영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기업도시·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토계획의 골간이 바뀌고 있다. 온 국토가 개발의 광풍이 몰아치고 환경보전의 목소리는 전혀 수면위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환경운동 진영은 속수무책이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대세를 바꾸기에 너무나 역부족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제자가 속한 녹색연합은 더 더욱 할말이 없는 처지이다. 이제 부동산 값이 어느 정도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근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해법이 우리들 속에서 나와야 한다.

다른 환경문제 전체보다 더 규모가 크고 급박하게 다가오는 지구온난화문제는 전 세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고 각 국의 정상들이 나서서 대책을 강구할 정도로 다급한 사안이 되었다. 금세기 안에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녹고, 런던, 암스텔담, 로스엔젤레스 등의 대도시가 물에 잠긴다고 한다. 그리고 수십억의 인구가 물부족에 시달리고 인류는 일찍이 경험하지 않았던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15년만에 처음으로 한강이 얼지 않았고, 봄과 가을이 짧아져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지가 오래다. 각종 생태계의 교란이 이미 발생하고 있고 기온의 상승은 세계 평균치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오던 한국의 언론들도 최근들어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시민들도 피부로 직접 느끼지는 못할지 모르나 그 심각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 지구 차원의 재앙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시급히 풀어야 할 난제이다.

또 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언제나 먹고사는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철학과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문제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상에 불과하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상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심각한 경기불황 심리에 휩싸여 있다. 한국 경제가 OECD 국가 중 드물게 4%대의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수년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경제가 실제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는 실제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문제에 대한 불안은 시민들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관심 이외에는 사회 다른 현안에 대해 무관심하게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심리가 부동산

문제와 맞물려 사회를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양극화 심화 문제, 고용없는 성장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풀어내는 활동이 환경운동 진영에서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나아가 생명 가치가 존중되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환경단체들이 앞장서야 한다. 경제문제의 해법이 곧 환경문제의 해법이며, 녹색경제를 통해 녹색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안을 언론이나 시민의 요구보다 한 발짝 앞서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변화된 시기에 맞는 운동방식의 개발도 적극 필요하다. 성명서와 집회로 대별되는 방식의 활동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워진 상황이다. 이제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을 주기 어렵다. 사회의 힘이 기업과 시장으로 넘어왔다면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 필요하며, 인터넷이 날로 발달하는 사회에서의 사이버 운동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요구된다.

셋째, 선행방식으로 운동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맞게 의제의 재설정도 뒤따라야 한다. 더 이상 이슈만을 쫓아 다녀서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녹색사회, 녹색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게 운동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운동 목표를 바탕으로 먼저 이슈를 만들어 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 즉 선행방식의 운동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은 물론 시장의 흐름에 대한 파악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핵심고리인지, 그리고 개발동맹 세력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개발사업의 첫 삽을 들기 전에 정책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바라는 대안세상(녹색세상)에 한 발짝씩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구체성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사회화하기 위한 운동을 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운동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과 방향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자극성 있는 기사를 선호하는 언론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마약이나 뽕 줄 알면서 그것이 순간의 쾌락을 준다고 계속 즐길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슈 대응방식이 갖는 한계를 알면서도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선행방식의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슈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슈를 정부나 개발론자들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동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과 시민으로부터 문제해결의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지구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역차원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철칙이 되어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들이야 이러한 고민이 당연하게 있겠지만 중앙에 있는 대부분의 단체들의 경우 지리·사회적 특성상 정책중심, 대형 의제 중심으로 가기 쉽다. 때문에 지역의 고민과 시민들과 결합에 대한 고민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문제의 현장은 늘 지역에 있다. 그리고 서울도 지역이다. 중앙단체의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상으로 한 고민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생태주의를 강조한다고 해도 결국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동뿐이다. 지역과 대중을 고려하지 않는 운동은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좀더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고 대중들과 함께 그들의 이해를 함께 풀어가는 방식의 운동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환경문제를 둘러싼 주민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다섯째, 녹색운동의 세력화이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녹색운동의 적극 지지할 세력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녹색의 대의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10만명만 된다면 녹색 진영과 개발동맹 세력간의 힘의 균형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녹색운동의 세력화는 쉽지 않은 숙제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세력화의 방안은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볼 수 있다. 우선은 각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을 보다 적극성을 갖고 활동하게 하거나 최소한 의사표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은 우선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지역에 기반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그나마 회원들의 참여하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중앙단위에서 전국의제를 갖고 활동하는 단체들의 경우는 회원을 단순한 지지그룹을 넘어 각 의제에 대한 행동 세력으로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회원들을 조직하여 의사표현을 하지도 못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사이버 시위 등에 회원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제 각 단체에 가입된 회원을 우선 녹색운동 세력으로 묶어 세우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물론 대부분 후원자로 분류되는 회원 모두가 운동세력화 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과제를 추진하다 보면 새롭게 어떤 사람들을 녹색운동 진영의 움직일 수 있는 세력으로 조직해야 할 것인가가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그리고 녹색연합의 예를 든다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모임과 회원모임이 있고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경우 활동력이 일반회원보다 훨씬 높고 결속력도 높다. 어떤 모임은 참여자가 수백명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모임의 활동내용과 녹색운동 진영이 추구하는 활동을 일치시키는 것도 녹색운동 세력화의 빠른 길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역 단위의 (준)공동체 개념의 그룹을 만들거나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협과 같이 지역에서 대안문화를 만들어가는 조직이나 지역단위로 교육운동(전교조 뿐 아니라 대안교육을 추진하는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는 모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회원들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공조직에도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풀뿌리 활동과 녹색운동을 연계하고 그들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녹색진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운동역량 강화 측면에선 개별 회원을 조직하는 것보다 지역의 소규모 풀뿌리 조직들을 녹색운동과 연계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녹색운동의 정치세력화를 빼놓을 수 없다. 아직은 녹색운동 진영에서 구체성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치세력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기초단위의 의회에서부터 광역의회, 그리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긴 호흡으로 어떻게 정치세력화를 이룰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녹색인사들이 개별로 정치권에 편입(제도화) 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단 한명을 배출하더라도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여야 하며, 정치권에 진출한 세력과 시민운동 진영에 있는 세력간의 결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성 있는 입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인으로 결합하였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그리고 몇 몇 국회의원의 예에서 보듯 그것은 개개인의 정치권 진출의 의미를 크게 넘어서지 못한다.

지금까지 충분하지는 않지만 환경운동 진영이 안고 있는 고민과 과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큰 틀에서 국토난개발을 막고 녹색국토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오는 것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모으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는 늘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전체 운동진영이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가면서 녹색운동의 활력을 높이고 녹색세상을 위한 주춧돌 하나를 놓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 풀뿌리운동이 희망이다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풀뿌리운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풀뿌리운동이 무엇인지, 과연 풀뿌리운동이 희망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현재의 시민운동이 어렵기 때문 일 것입니다.

굳이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위기라는 표현이 '뭔가 잘되고 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거나 '방향은 올바른데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위기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많기 때문 일 것입니다. 시민행동만 하더라도 내부에서 위기를 이야기하면은 '한번 잘나가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위기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풀뿌리운동을 하는 단체의 한 활동가는 "왜 갑자기 시민운동이 위기라는 것이냐? 정말 시민운동이 위기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서울에 있는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연 등 흔히 메이저 단체의 위기를 곧 시민운동의 위기와 동일시 한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시민운동 혹은 시민단체가 위기인지를 분명히 해야 극복방향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 판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필자는 이런 측면에서 현재 시민운동의 위기는 '90년식 시민운동'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시민운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운동을 치열하게 잘하는 것으로 극복될 수 없고 운동의 가치, 주체, 방식 등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방향이 풀뿌리운동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온전한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에는 풀뿌리운동을 고민하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여러 운영위원들, '이음'과 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가 함께하는 풀뿌리 포럼에 참여하는 여러 활동가들과 전문가들, 무엇보다도 항상 힘과 영감을 주는 지역의 풀뿌리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 2. 풀뿌리운동이란 무엇인가?

풀뿌리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풀뿌리운동은 000이다."라고 물으면 느낌, 생활, 주민운동, 과정, 여성, 소통 등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풀뿌리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생각을 뽑아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풀뿌리운동은 공간적으로 ‘지역’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하승수는 풀뿌리자치운동을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 대중이 스스로의 삶의 공간에서 집단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려는 의식적인 활동”이라 정의 합니다. 여기서 풀뿌리운동은 ‘지역’보다 ‘삶의 공간’으로 정의되어 “폭넓은 의미의 지역운동과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즉 운동공간을 지역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나 활동가 중심의 운동노선을 따르면서 사람들을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소외시킨다면 풀뿌리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하승수는 풀뿌리운동의 과제를 대안 창출, 상호소통과 협력, 아래로부터(풀뿌리로부터)의 전사회적 의제설정,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본다.

<초록정치연대>의 주요섭은 운동의 ‘현장성’을 강조합니다. “운동의 현장은 주민들이 사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 시위의 현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 YMCA>의 김경민은 오히려 “농촌으로 대표되는 정주형 공동체가 파괴되는 도시의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대부분인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운동이 가능한가?”라고 묻습니다. “아파트 중심의 도시가 20년이나 15년마다 재건축 혹은 재개발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풀뿌리운동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풀뿌리자치연구소>의 하승우는 “단순히 지역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풀뿌리운동을 정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겠다. 모든 지역운동이 풀뿌리운동일 수는 없다. 그리고 풀뿌리운동은 단순히 지방에서 진행되는 운동을 가리키지도 않는다. 지방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운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풀뿌리운동이 각각의 지방에 고립된 운동을 뜻하지도 않는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초집중화와 세계화의 현실에서 지방은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시민행동>의 하승창은 “많은 시민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이 풀뿌리 지역자치 조직 활성화로의 방향 전환을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극복 대안으로 제시하고 ‘중앙 집중형 연대운동보다 지역·분야별로 분화된 풀뿌리 자치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나 ‘전체 사회 운동적 관점에서 보자면 시민 자치적 기능은 지역 수준에서 담당하고 중앙조직은 대변적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 조직을 지원하는 센터 구실을 맡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은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용인하자는 것이 되어서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담아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의 공통점은 풀뿌리운동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운동의 관점에서 풀뿌리운동을 바라보는 <풀뿌리자치연구소>의 이호는 주민을 “권력을 지닌 자나 전문가들로부터 대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 가야 할 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호는 “주민자치운동은 특정한 이슈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를 통해 평가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기준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했는가, 그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를 과정으로서 개념지웠듯이, 주민자치운동 역시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승수는 풀뿌리운동의 주체를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 규정하고 중요한 것은 “단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과정을 통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치능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변화를 만들어나가는 힘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주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풀뿌리운동의 실천과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풀뿌리운동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승우는 이러한 이호와 하승수의 관점을 “풀뿌리운동의 주체를 주민이라 호명하지만 그 주민의 범주를 분명하고 엄격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풀뿌리운동을 주체의 문제로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는 주체를 ‘존재’의 관점이 아니라 ‘생성(becoming)’의 관점에서 고민하게 한다.”고 합니다.

필자 역시 풀뿌리 운동은 공간적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운동을 조직화하고 드러내는 방식이 90년대 시민운동과 다릅니다. 속도를 중심으로 한 운동에 대한 반성, 공간을 재조직화하기 위한 운동,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만드는 운동, 다른 언어만이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운동, 여성을 중심으로 한 운동, 제도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 성과를 독점하지 않고 여럿이 함께 나누는 운동이 풀뿌리운동의 특성입니다. 아래 표는 이런 풀뿌리운동의 특성을 90년대식 운동과 단순화시켜서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표> 90년대 시민운동과 풀뿌리운동

	90년대 시민운동	풀뿌리운동
운동 대상	사회구조(법과 제도, 정책)	사람과 생활(의.식.주)
운동 방법	하향식 (세상을 진단하고 논평하는 방식)	상향식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자가 좋아서 하는 방식)
운동의 주체	시민단체	주민
운동의 평가	성과 중심 (언론의 보도, 법제도의 변화 등)	과정 중심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만족 등)
합의양식	선거와 관리주의	뽑기(?)와 자율주의
운동의 속도	빠름 (1년 단위 총회, 프로젝트 등)	느림 (중장기적 프로젝트, 계획 등)

### 3. 90년대식 운동의 한계

#### 1) 제도를 중심으로 한 운동의 한계

90년대 시민운동의 주된 비판은 ‘시민없는 시민운동’, ‘백화점식 시민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전자가 시민의 ‘운동적 참여’가 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면 후자는 그 지적을 포함하면서도 전문가 중심의 제도개혁운동과 그에 맞는 운동방식을 지칭한 것입니다.

90년대식 시민운동은 전문가가 마련한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이를 주장하고 공론화하며 제도

화하는 것을 통해 나라의 구조를 바꾸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형식적으로나마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일부 정책이 수용됨으로써 더 이상 시민들의 실천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의 정규호는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확대 과정을 통해 등장한 절차적 합리성과 합법성 요구가 시민운동의 운동성을 약화시킨다. 제도적 참여 기회 확대로 사회의 갈등이 제도내에서의 갈등이 된다. 제도를 깨고 나오는 시민단체들의 제도 밖의 정치적 투쟁은 ‘시민운동은 반대만 한다.’는 것으로 갈등의 책임을 부담지게 되는 거버넌스의 덫에 빠진다.”라고 운동의 제도화를 경계합니다. 정보공개, 주민소송, 주민발의(입법청원), 참여예산 등 직접참여제도는 운동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변화와 역동성을 기반으로 한 ‘운동’과 안정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 사이에서 근본적인 긴장과 갈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 대변형 운동의 한계

90년대식 시민운동은 개혁적인 전문가들이 시민단체의 직함을 달고 정부 정책에 대하여 정치·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성명과 논평하는 방식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방식의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의 정치화 혹은 권력화 등 무엇이라고 표현하던 시민운동의 순수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심하는 순간, 시민들에게는 매력 없는 시민운동이 되고 시민들은 시민운동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민주정부와 민주노동당의 등장으로 시민운동진영의 개혁적 의제들이 행정과 정치 영역에서 일정 부분 수용되고, 보수 진영에서도 시민단체를 만들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시민운동의 독점적 지위 상실’입니다.

시민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매개했던 언론 매체들이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갈등으로 분열되면서 시민운동 진영의 목소리들을 균형 있게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함께했던 전문가들조차도 굳이 시민단체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직접 참여해서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

## 3) 개인 실천 시대의 도래

필자는 시민운동이 어려운 것에는 동의하나 시민사회가 그 폭과 내용이 넓고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의 어려움은 오히려 이러한 시민들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해서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이후 “기억에 남는 시민운동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최근 경실련의 ‘아파트거품빼기운동’이나 정토회의 ‘빈 그릇운동’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반면 새만금사업 중단을 위한 삼보 일배, 지울스님의 단식, 강대석군의 학교종교자유투쟁,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등은 세상을 평론하거나 전문성을 무기로 싸우지 않고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증명하기 위한 실천이 무기였고, 여기에 인터넷에서의 대중적 지지가 결합됨으로써 주목받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웹2.0이나 이용자 손수제작이라는 UCC, 온라인백과사전(위키피디아)으로 알려진 위키 등 개인 실천 시대의 도래한 것입니다. 언론도 다음의 아고라나 네티즌 청원처럼 네티즌 토론과 개인 청원 등은 주류언론의 중요한 뉴스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시민운동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4) 관성(표준)화 된 운동 패턴의 한계

세상은 변화하고 시민들의 실천방식도 달라지는 시민운동은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기 보다는 회의하고 보도자료 날리는 일정한 표준화된 방식의 운동을 되풀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민행동>과 <오마이뉴스>가 함께 한 희망투어<sup>7)</sup>에서 만난 한 활동가는 “지역에서 운동하면서 서울 시민단체들의 운동방식을 비판했었는데 문득 내가 서울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고 이야기합니다. “시민들과 함께하기보다는 회의하고 보도자료 보내는 표준화(?)된 방식의 운동을 되풀이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이러한 관료화된 운동에서 벗어나 시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운동의 미래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의 각 조직은 비전과 사명, 그리고 회원의 구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을 만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70~80년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상근활동가들이 전국적인 아젠다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동의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이라는 진단입니다.

각 조직이 회원들이나 시민들을 만나 시민 속에서 의제를 발굴하면 다른 사업의 내용과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만나서 회의 한 사람을 낮에 또 만나는 구조에서는 새로운 운동, 시민들의 요구에 기초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로부터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시민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운동의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식의 변화가 내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운동조직은 분명 다른 운동의 내용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 시민행동에서 Active X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어떤 언론도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블로그에 올리자 200개의 댓글이 달리고, 이 글을 보고 언론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당연히 행자부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자들도 왜면 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것, 사진을 찍기 위한 포퍼먼스는 우리들만의 운동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 5) 성과와 효율중심의 운동의 한계

‘속도’는 운동의 방식이자 가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속도와 규모는 효율을 나타냅니다. <초록정치연대>의 우석훈은 “한국사회는 박정희를 회상하며 규모를 사랑하는 메갈로매니아가 되

7)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오마이뉴스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현장 보고서 - 희망버스의 16일간 전국일주"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느릿느릿 세상을 바꿔가는 현장과 풀뿌리 시민운동가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전체 내용은 시민행동의 오마이뉴스 블로그 <http://blog.ohmynews.com/activist> 참조.

었고,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속도를 숭배하는 속도중독에 걸렸다. 비정규직이나 그 이하의 국민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도 이미 삶의 안정권에 들어간 일부 국민들은 규모와 속도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통들이 되었다. 아파트, 자동차도 커야 하고, 키도 커야 하고, 통장 예금액도 커야 한다. 그리고도 빨라야 한다. 보다 빠르고 보다 커지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 된 이 나라에서 양극화는 작고 느리게 된 도태된 사람들과, 크고 빠르게 된 ‘성공한 인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한겨레〉 2006년 10월 19일자)

정규호는 ‘개발독재’ 체제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독재’는 청산했지만 ‘개발’주의는 민주화된 국면 속에서 더욱 세련된 경쟁논리와 나름의 법적 절차와 제도적 합리성, 전문성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성장 담론과 개발주의에 대항하여 ‘생태·자치·문화’ 등의 가치에 기초한 새로운 진보의 담론과 실천적 의제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기존의 정치적(절차적) 민주화를 사회경제적(실질적) 민주화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주장’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연결될 경우 신개발주의의 영향력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흔히 90년대식 시민운동도 속도와 규모를 통한 효율을 추구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운동이 성장에 한계가 왔습니다. 회원은 정체 혹은 감소되고, 전문가들의 참여도 떨어지고, 상근자활동가들의 고령화와 충원의 어려움 등 운동의 재생산이 어렵습니다. 아침에 만나서 회의한 사람을 낮에 또 만나는 현재의 시민운동 구조로는 사람을 키우지 못합니다. 시민운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재가 연대의 ‘Happy TIME 캠페인’과, ‘NGO 혁신모델’ 프로그램은 좋은 실험이라 생각합니다.

#### 4. 풀뿌리운동이 대안인가?

##### 1) 경계 넘기

“풀뿌리운동이 시민운동의 뉴 웨이브가 될 수 있을까?”는 시민행동이 주관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대화모임’의 주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재단의 윤정숙은 “새로운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운동을 표현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스피커’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풀뿌리운동가의 현 운동에 대한 진단은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후배활동가는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포럼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매번 비슷한 주제로 매번 등장하는 사람이 식상한 언어로 하는 발제와 토론은 아무런 감동이나 충격이 없다.”고 합니다.

활동가들의 상상력과 창조적 실험을 제약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틀에 박힌 보도자료 등 글쓰기, 기자회견이나 포퍼먼스 등 규격화된 실천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단체는 있으나 그 안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FTA에 반대하는 단체의 성명은 있는데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성명이 나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고유기는 “한없이 자유롭고 싶다. 진짜 자유는 일상을 깨는 것이다. 일상을 깨려면 구조에 저항해야 한다. 나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는 두려움이 소통과 관계를 방해한다.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을 회복(현장성 강화)



하고, 연대(약자와의 연대, 시민운동가와 개인과의 연대)를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 녹색삶의 정의영은 “풀뿌리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대중들에게 둘러내는 치열한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서울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들었다면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활동가 개개인이 들어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개인 실천시대의 시민운동의 방향이고 ‘주체’와 ‘과정’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풀뿌리운동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풀뿌리운동은 운동의 성과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내가 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자만에 빠진다. 운동의 근원을 따져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풀뿌리운동은 대안을 꿈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럿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성공보다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협동과 나눔이며 최악의 무지는 대립과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꿈이 있고 이 꿈은 나누면서 더 커집니다.

이러한 협동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한국주민운동의 역사와 경험을 간직한 정보교육원(<http://conet.or.kr>)주민운동의 원칙으로부터 배워왔으며 일부 덧붙인 것입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오직 주민 스스로만 그들 자신을 도울 수 있다.
- 둘째, 지도력은 주민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 셋째, 주민은 조직을 통해 힘을 가진다.
- 넷째, 조직의 기초는 주민 자신들의 이해관계이다.
- 다섯째, 투쟁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 여섯째, 주민운동은 저절로 공공선을 지향하지 않는다.
- 일곱째, 협동과 나눔의 사회경제프로젝트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 이렇게 협동으로 문제를 해결해본 사람은 문제 앞에 또 다른 협동을 생각한다.

## 2) 사람을 향한 운동의제와 방식

삶의 행복은 물질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주류 시민운동의 대안은 물질과 제도 중심이었습니다. ‘성장’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정책대안은 인간의 물질욕망을 근본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운동의 내용이 제도와 물질보다는 ‘삶과 정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생태·인권·문화’ 등의 가치에 기초한 대안적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의제화가 절실합니다. 가치와 문화적 양식의 변화로까지 운동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주요섭은 “성장담론에 대항에서 ‘제로성장’을 의제로 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고민하면서 “생명과 평화를 중심으로 운동을 재구성하기 위한 ‘문화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도를 바꾸는 운동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스스로가 변하는 운동, 즉 실제로 삶의 구체적 공간에서 대안적 삶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운동’ 자체의 가치와 특성, 과정에 대한 고민입니다.

풀뿌리운동에서 배워야 될 것 중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풀뿌리활동가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 마음가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등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운동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처럼 시민들이 호응해주지도 않고, 웬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봅니다.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한 활동가는 운동을 하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냐고 묻습니다. 모두가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단체들은 사람이 소중한 걸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 만큼 느낍니다. 저는 그게 운동의 진정성이라고 봐요. 그리고 전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근차근 한 사람 한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몸소 실천해나가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역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것도 거창한 이론이나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성공 여부는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자세와 진정성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닐까요. 희망이 없으면 일하지 말아야지요. 스스로 희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역에서는 일 못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진심으로 일하다보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풀뿌리운동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은 희망을 멀리서 찾고 있지 않았습다. 자신 생활하고 삶의 영위하는 곳에서 생활인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운동가라고 드러내기 보다는 일상의 생활이 곧 운동이라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말과 실천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민운동을 위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운동과 생활과 정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풀뿌리운동이 새로운 가치, 대안의 가치를 실험적으로 실천하고 내면화 하고 있습니다. 생협, 공정무역 운동, 지역 통화 운동(LETS)과 같은 대안 경제 운동, 느리게 살기 운동과 같은 대안적 삶의 운동, 귀농이나 문화 등과 같은 지역 공동체 운동 등이 그것입니다. 다양한 풀뿌리운동이 어떠한 모습으로 네트워크 되고 사회를 변화 시키는 힘으로 모아질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존의 90년대 식 운동과 다른 풀뿌리운동이 5년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꽃피 있게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3) 운동의 복원

풀뿌리운동이 다른 가치와 방식으로 우리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풀뿌리운동은 운동의 가치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방식에서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리고 인물들도 새롭게 거듭납니다. 시민들은 싸움 속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장하고 세력화(Empowerment)를 추구합니다. 진정한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힘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조례를 만들 때 의원이나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발의하도록 하지 않고 어려운 길인 주민발의를 하는 이유는 주민교육과 캠페인, 감사 청구와 시위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정치쟁점화 시키고 주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 과정이 참여와 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를 생활에서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풀뿌리운동이 시민운동의 주류로 되기에는 많은 실험과 양적인 축적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승우는 “중앙에서 고조되는 시민운동의 위기담론과 달리 삶의 터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다양한 풀뿌리운동들이 한국사회에 존재한다. 이런 경향을 볼 때 한국의 풀뿌리운동이 기존의 시민운동이 드러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풀뿌리운동만으로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경쟁과 성장 중심의 사회에서 풀뿌리운동이 가진 대안적인 희망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풀뿌리운동이 만병통치약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기존의 사회운동과 풀뿌리운동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모색하는 시도, 농촌사회에서 농민운동과 결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이렇게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뜻을 모은다면, 운동의 동반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 내의 운동역량을 전체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베른슈타인(E. Bernstein)이 강조했던 도시노동자들의 소비협동조합과 농촌의 생산협동조합이 매개되는 틀이 마련될 수도 있다.”<sup>8)</sup>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풀뿌리운동과 기존의 사회운동이 서로 힘을 모으기 위한 공감과 연대는 소수 활동가나 전위조직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존의 운동관이 아니라 풀뿌리운동 방식의 운동관의 적합하다.”고 합니다. 풀뿌리운동의 성공은 특정 개인이 운동을 이끌어가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하며 활동대상과 범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주체가 아닌 주체를 기르며 함께 나아갈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이것이 본래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풀뿌리운동을 운동의 ‘관점과 정신’으로 이해합니다. 풀뿌리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역으로 내려가자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복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참고문헌>

오관영. 2006. “풀뿌리운동 현장보고: 희망투어 17일간의 현장 기록”.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공동주최 풀뿌리정책포럼 발표문.

우석훈. 2006. “오늘도 엑셀을 밟고 있는가”. <한겨레> 2006년 10월 16일자.

이호. 2002. “주민자치·주민자치운동의 현황과 과제”. 시민자치정책센터 편. 『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 서울: 갈무리.

정외영. 2006. “지역 풀뿌리 운동에서 보는 희망”. 제2회 대화문화아카데미 시민운동 기획포럼 발표문.

주요섭. 2006. “이제 ‘녹색대안정당’이다-녹색정치의 깃발로 생명평화의 무지개를!!!”. 초록정치 창당준비위 발표자료.

하승수. 2006. “왜 풀뿌리운동이 희망인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창립토론회 주제발표문.

하승우. 2006a. “한국의 풀뿌리운동과 풀뿌리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접근: 풀뿌리운동에 대한 낙관이나 불신을 넘어서기 위한 이론화의 준비작업”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공동주최 풀뿌리정책포럼 발표문.

8) 협동조합에 관한 베른슈타인의 고민은 그람시(A. Gramsci), 폴라니(K. Polanyi)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하승우, 2006b: 52~54).

하승우. 2006b. “풀뿌리공론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하승창. 2006. “90년대 중앙집중형 시민운동의 한계와 변화에 관한 연구-경실련, 참여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7 대선,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서주원(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소장)

### 1. 들어가는 말

진보개혁세력의 위기가 논의되고 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뤄져 건국 이후 줄곧 권력을 장악했던 수구기득권 세력이 권력에서 물러났다. 수구기득권 세력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권력 되찾기에 실패했다. 수구기득권 세력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의회권력마저 내놓았다. 게다가 제17대 총선에서는 유일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43년 만에 원내에 진출했다. 이로써 합리적 자유주의 중도세력이 지역갈등과 색깔론을 기조로 하는 수구기득권 세력을 대체하고, 진보-보수가 공존하는 ‘정치의 정상화’를 기대했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던 수구기득권세력은 강력한 저항전선을 형성했고 이 저항을 뚫지 못한 참여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상실했다. ‘야만과 광기의 정치’가 지속되었고 ‘민주주의의 위기’와 ‘진보개혁세력의 위기’가 나타났다. 5.31 지방선거를 통해 재차 확인된 민심 이반은 수구기득권 세력이 다시 득세하는 ‘반동의 세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 진보개혁세력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은 지난 해 치러진 5.31지방선거였다. 선거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민주노동당의 부진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하나로 묶어 ‘민주진보개혁평화세력’은 무능하다는 인식을 국민이 갖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 진보개혁세력의 위기 원인은 몇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참여정부의 ‘현상적 정책실패’가 국민들로 하여금 진보개혁세력은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

○ 참여정부 4년의 공과를 따져보면 여러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들이 눈에 띈다. 정치와 선거에서 부패와 비리가 줄어들고 깨끗해졌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성과일 것이다. 이른바 권력기관을 통치에 동원하던 나쁜 관행을 버리고, 민주주의의 신장과 분권에 기여한 점도 인정할 수 있다. 현대사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과거청산 작업을 시작한 것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경제 부문에서도 참여정부의 성과는 있다. 수출 3천억 달러의 달성과 외환 보유고의 증가,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을 웃도는 성

장물 등 충실한 거시 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문제는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경제가 거시지표와 많이 동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꾀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고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현실이다.

○ 참여정부는 무능력하고 비개혁적이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개혁은 ‘포위된 개혁’으로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예컨대 4대개혁입법 추진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불러왔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진보개혁세력의 반발을 불러왔다. 집권과정에서는 운동정치의 성향이 강했던 참여정부는 집권 이후 제도정치에 치중하는 모습을 그러나 제도의 개혁에 실패하고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제도정치를 통한 개혁에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참여정부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수구적 저항 전선을 뚫지 못한 것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고 진보개혁세력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확대와 심화였다. 프리덤 하우스는 “고도로 정치화된 탄핵에 뒤이어 치러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치과정이 강화된 이후 정치적 권리가 향상되었다”는 점을 한국의 ‘정치적 권리’ 등급을 상향조정한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한국 민주주의는 매우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다. 현 단계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회의는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징표로 일체의 식민통치를 노골적으로 미화하고, 해방 후 군사독재가 찬양받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 일본군 장교를 지냈으며,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뒤 인권침해를 일삼고 국민의 자유를 짓밟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받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 증상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으로 꼽히고 있는 것도 동일선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날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던 3,40대가 진보개혁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한나라당 지지, 이명박 지지의 기반으로 바뀐 현상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징표이다.

○ 이명박 신드롬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3김의 퇴장과 더불어 이제는 사라진 것으로 간주된 ‘메시아주의’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현대판’으로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이명박 전 시장이 ‘청계천’에서 보여준 추진력과 현대 CEO로서의 ‘경제적 능력’을 발휘해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영웅’으로 이명박 신드롬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눈 감게 만들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더 확대된 양극화와 부진한 일자리 창출, 보수언론이 중심이 되어 과대 포장한 경제위기론 등이 국민들을 이명박 전 시장의 결함에 관대하도록 만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치 철저하게 검증하고 응징하는 국민이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전 시장 등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묻지마 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지지의 바탕에는 그를 개혁 내지 중도로 평가하는 태도가 내재되어 있다. 민주개혁세력이 무능하다는 낙인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시장이 성과와 실적을 내세워 개혁 또는 중도의 이미지로 치장해 3,40대의 지지까지 독점하게 된 것이다.

○ 대선을 놓고 정치권과 언론은 매우 뜨겁지만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차갑기만 하다. 참여정부에 대해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국민의 정치불신은 매우 깊어져 더욱 냉소적이 되었

다. 한나라당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참여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무언가 국민에게 확실한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 2002년 대선과정을 휩쓸었던 열기가 17대 대선을 앞둔 지금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다.

○ 지금의 정치구도가 12월 대선까지 순탄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구도를 흔드는 변수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변수는 열린우리당 내부의 변수인데 대통합 신당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에서 비롯될 변수인데, 원 포인트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문제이다. 세 번째 변수는 한나라당 내부의 변수인데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한 ‘이명박 검증론’으로 촉발된 한나라당의 검증논란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느냐 하는 점이다. 네 번째 변수는 북핵 문제인데 6자회담이 극적인 성과를 끌어내면서 다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잠재적 변수의 하나이다. ( 21일 민주노동당 주최 민주진보진영의 2007 대선전략 토론회에서의 손혁재 정세진단)

－ 진보개혁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의 대응이라기보다는 대중적 시민사회단체의 대응방식에 대한 논의

－ 누구를 당선시키는가 혹은 어느 세력이 집권하는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상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각인시키려는가의 문제

－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의 완성, 그러나 연속된 정책 실패와 개혁의 실패, 언론의 의도된 과도한 트집잡기로 국민적 비판과 개혁세력에 대한 환멸,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도도 동반추락

－ 경제자유구역, 경인운하, 새만금, 천성산, 장항갯벌, 한탄강댐, 골프장 건설 등 기대와는 달리 이전의 정부와 차별성 없음,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경제기조를 유지,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경제 우선주의적 분위기를 확산시킨 측면이 크다. 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오류와 이전의 국민의 정부 시절 조급한 IMF 체제 탈출이라는 정책과오에서 비롯한 가계금융 위기로부터 비롯된 바 크다.

－ 참여정부 정책의 성과와 과제(1.31)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주관

참여정부 4주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합동심포지움 ‘참여정부 4년 회고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

－ 시민사회세력으로서의 성과도 없이 억울한 측면이 많음

－ 참여정부 개혁의 한계; 신자유주의적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함, 이는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크지만 정권의 구성원들의 생각의 한계이기도 함

## 2. 이번 대선의 성격

－ 고려대 최장집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정당과 국회를 배제하고 운동정치에 치중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실패의 책임을 질 것을 밝혔다.

－ 민주노동당은 87년 이후 형성된 불완전한 민주화체제의 붕괴위기와 개발주의적 보수지배체제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번 대선을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이 땅의 진보개

혁세력은 통합신당에 대한 비판적인 지지나 각개 약진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의 '진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신당이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대안 세력이 되기 어렵고, 진보개혁세력이 각기 독자적인 후보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민주노동당과의 연합을 통해 진보-중도-보수의 한 축을 튼튼하게 형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대선에서 반한나라당의 기치아래 단일 후보의 지지보다는 명확한 진보세력의 구축을 통하여 차기 총선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듯 하다.

- 미래구상도 정세의 진단은 비슷하지만 수구적 보수집단의 집권을 막기 위하여 대안적 범국민후보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열린우리당의 분열로 형성되는 중도 개혁적 통합신당의 반한나라당 후보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와 비슷하다.

- 민주 대 반민주, 개혁 대 수구와 같은 단일한 전선( 92년 이후 정권들이 보여준 국정능력은 이제 더 이상 민주화 세력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 수준에서의 신뢰를 보이지 않고 국민들은 구체적인 희망을 갈구하고 있음)에서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적 이슈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신개발주의 혹은 박정희 정권시절의 개발주의로의 복귀

-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인물위주 선거 예상, 이명박은 지금은 40% 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한때는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이회창 대세론이 한창이던 2002년보다도 높은 지지율이다.

- 그러나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비개혁적 세력, 경제우선주의의 발호(3만불 혹은 4만불 시대, 반값아파트 등의 부동산문제, 경부운하, 한중페리 등)

- 전반적으로 개발공약류가 난무하고 사회비전의 실종

- 미래구상 : 신개혁세력 승리를 목표로 정책개발과 국민후보

개혁과 진보를 기대했던 세력의 수구세력 집권 가능성에 대한 자구노력

일부 환경정책의 수용

그러나 녹색대안적 사회의 비전제시까지는 미흡

-시민사회단체는 전면전보다는 기동화된 진지전으로 대응해야

### 3.핵심은 비전 제시

- 화제성 위주 보도,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식도 후보의 개발공약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라는 근본적인 한계,

-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후보들에게 채택토록 강요할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

- 그동안 2차례의 총선연대와 대선연대 활동 그리고 지방선거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

- 결론적으로 우리의 사회상을 만들어 각인시키는데 실패

- 녹색의 대안적 사회상에 대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하는가가 우리 활동의 관건, 담론 형성

-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서 실정과 무능력,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신



등으로 표현되는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형성된 한나라당 후보 특히 수구적 개발세력에 대한 인기를 무력화 시켜야

#### 4. 어떻게 할 것인가?

-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공약자료집 발간, 정책선거 유도  
공명선거 실천협의회, 대선연대와 비교하여 총체적인 정책선거 유도
- 창조 한국 미래구상의 활동도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기여

##### 1) 방향

미래구상과 같은 후보만들기와 당선운동과는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정책활동, 그러나 매니페스토, 미래구상과의 정책적 연대

후보의 개발 공약에 대한 단호한 대응: 상당한 수준의 캠페인과 시위까지  
우리들의 대안 사회를 위한 정책개발과 홍보

##### 2) 대선 팀 구성

- 구성 : 지역, 전문가, 활동가 등 각 시민사회단체가 보유한 인적자원
- 임무 : 정책개발(공약개발), 공약분석, 대국민 진술개발
- 일정 : 2월 중 구성, 기획단계(준비를 위한 기획단 필요)

4/23 예비후보자 등록(대선 대응 선언)

하반기 역량 추가 투입, 대선 대응을 위한 대규모 조직 형성

9/20 선거운동 제한

11/25 후보자 등록

12/19 투표

- 공약(정책)의 내용

시민사회 각 분야의 각론적 정책개발(요구수준을 뛰어 넘는)도 필요하고

3만불 시대 전체적인 한국사회의 상(예 : 문국현의 지식사회, 환경단체의 녹색대안사회)

향후 5년동안의 한국사회비전 --> 명쾌한 형상화 필요

- 시민사회단체의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회(여성, 참여, 환경, 문화, 교육, 복지 등)

- TV 광고도 고려해야

##### 3) 활동 방식

- 단체별 분야별 역할 분담 : 개별 단체의 독자적인 준비와 활동
- 선택과 집중 : 2 - 3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와 역량집중

## 5. 맺음말

적극적 지지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활동의 한계  
설혹 대상이 있다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 대중적 시민사회환경단체의 직접적 선거개입의 한계  
신개발주의적 공약의 저지와 녹색비전의 확산의 계기가 되어야  
이제 이런 비전을 갖지 않은 후보의 당선은 똑같은 실패의 반복

## 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1. 2007년의 한반도와 사회운동 - 안보의 역습과 민주주의<sup>9)</sup>

#### 1. 2007년의 한반도 : 선거, FTA, 핵무기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다. 이번 대선이 87년 6월항쟁 이래 20년간 지속되어 왔던 ‘민주개혁 국면’에 중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존재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정권교체 여부를 놓고 중단 없는 개혁이나 아니면 후퇴나 식으로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5년 전 가장 극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집권한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의 성취를 살피건대, 전선의 이편과 저편을 가르는 정치공학의 내포는 때론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사회운동이 “지난 20년간 추구해왔던 ‘민주개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20년 민주개혁의 성공과 후퇴의 조건은 무엇이었으며 장애물과 극복대상은 과연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보다 진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른바 87년 체제의 극복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 민주발전 도상에서 직면한 내적 한계와 외적 도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한편, 올해는 한미FTA 체결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되는 해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는 대선 이상의 의미를 지닐런지도 모른다. 한미 FTA는 97년 경제위기 이후 분명해져온 신자유주의적 경쟁구조와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한국경제의 발전경로를 미국경제의 하위체제로 고착시키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영향력을 항구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한미FTA는 사실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이 도박은 꼼꼼한 경제적 이해타산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한미FTA는 시장에 대한 맹신 이상으로 미국의 정치군사적 패권에 대한 맹신, 즉 ‘안보 논리’에 기초해 추동되고 있다. 현 시기 미국과의 경제통합은 한반도의 전후체제 혹은 분단체제의 근간이 되어온 배타적 대미편승구조를 다시 한번, 변형된 형태로 재승인하는 의미를 지녔다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편승하고자 하는 미국이 ‘대테러전쟁 시대’, 자기중심성을 한껏 노골화한 패권제국이라는 점이다. 한미 FTA는 실제에서도 졸속적이고 불평등한 경제적 동맹으로 귀결되고 있다. 당연하게도 한미 FTA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의 선택 폭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

9) 코리아연구원-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시리즈 「2007년 코리아의 전망과 과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선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주체들에 의해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한미FTA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미래에 대한 선택권의 탈취라 할만하다. 또한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장래 한반도 주변국 관계도 꼬이게 할 수 있는 ‘트로이의 목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은 이른바 ‘2차 한반도 핵 위기’ 역시 중요한 고비를 지나고 있다. 최근 북미 양자접촉 결과 양국의 입장이 긍정적이고 6자회담도 곧 재개될 것이라고는 하나 아직 최종결과는 낙관할 수 없고, UNDP 대북원조 중단 시비 등 새로운 북병도 만만치 않다.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무장개입을 확대해가는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동향을 보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위기관리 수준을 넘어선 전향적 방향으로 전환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요컨대 핵을 둘러싼 한반도-동북아 위기의 평화적 해결 전망은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매우 유동적이다.

북핵 해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최근 북한의 조기봉기를 점치는 ‘유사사태’대비론이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그러나 이 전망이 다분히 주관적 기대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흡수통일 혹은 휴전선 이북으로의 군사개입 등 일방주의를 당연시한다는 점에서도 경계되어야 한다. 다만, 북한체제가 이행의 도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정권은 미국의 봉쇄와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선군주의라는 특유의 군사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북의 ‘선군주의’는 자위의 체제이자 매우 불안정한 이행의 체제이다. 그러나 이행의 맥락에서 북한정권과 인민을 바라볼 때 선군주의가 정당화하는 외부의 위협은 실재이면서 또한 허구이기도 하다. 북의 군사주의가 동북아에 또 다른 군사주의를 부르는 부메랑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북한 핵 혹은 북한 문제는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후 냉전체제의 이행의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테러전쟁이라는 새로운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이행의 복잡한 동학을 간과하고 ‘북핵’문제 혹은 ‘북한문제’를 고립적으로 사고하고 집착해서는 좌표를 잃을 수 있다.

최근의 상황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타깃이 북한일 뿐만 아니라 남한일 수 있다는 서동만 교수의 지적을 되새기게 한다. 미국은 북의 핵폐기 뿐만 아니라 통일국가로까지 이어질 군사동맹의 영속화를 추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진행되는 남한에서의 한미동맹 재편은 동북아 전체의 판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서 ‘동맹’과 ‘패권’에의 편승이 가져올 연쇄적이고 장기지속적인 부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미래 동북아에서 과연 ‘군사동맹’이 건설적인 틀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남한 시민사회와 국가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평화체제를 주도할 일관된 민주주의 평화 역량이다. 우리의 선택방향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민주적’인가, ‘문제해결 지향적인가’, ‘평화지향적’인가를 점검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 2. 지난 5년 - 대테러전쟁과 민주주의의 충돌

2007년 한반도 주변 정세에 조응하는 사회운동의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지난 수년간의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21세기 초 남한의 시민사회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5년전 이 땅에선 붉은 악마의 물결, 촛불집회의 열기, 그리고 한 비주류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폭발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2000년 낙선운동에서 2004년 탄핵반대 시위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자발적 시민행동들은 87년 이래의 민주개혁 국면에서도 매우 독특한 현상이었다. 이 역동적 민주주의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형성된 민주화 동력과 6.15선언으로 마련된 한반도 해빙의 분위기가 연결된 시점에서 터져나온 것은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9.11 이후 미국이 선포한 이른바 대테러 전쟁은 한반도의 짧은 해빙국면을 다시 열어 붙게 했다. 미국은 ‘대테러전쟁’을 동북아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의 재강화에 심분 활용하고 있다. 대테러 공조와 반확산을 내세운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을 추구하는 한반도의 지향과의 상충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초기의 마찰음은 격렬했다.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선제공격 구상에 대한 반발에서, 촛불집회,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까지 남한 시민사회는 거의 본능적으로 ‘사그라드는 봄’을 되찾기 위해 행동하였다. 6.15선언 전후의 대북포용정책은 2차 한반도 핵위기에 도 93년 ‘불바다’ 논란 당시의 사재기 파동과 같은 ‘심리적 공황’의 재연을 막아주었다. 이는 놀라운 ‘불가역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테러 전쟁 이후 냉전시대에 형성된 안보집단, 극우적 대결적 가치관의 목소리는 명백히 강화되고 행동화되었다. 북미간 갈등이 군사적으로 첨예화되는 조건에서 한국정부의 선택폭은 줄어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보다 한 층 어려운 조건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야 했지만 김대중 정부보다 더 미숙했다. 이러한 이중의 한계는 노무현 정부 대외정책의 혼선을 심화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대테러전쟁 정책에 편승하면서 이른바 ‘균형적 실용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파병 대신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 접근을 대가로 제공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라크 점령정책과 대북 압박 정책은 미 부시행정부 대테러 전쟁 구상의 핵심적인 기둥으로서 ‘파병’의 대가로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곧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는 또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동북아 허브기지를 제공하는 한편, 작전통제권 환수와 더불어 국방비 증액 등 군의 정예화를 추구했다. 이는 국내 보수세력으로부터 반미좌파라는 왜곡된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중국에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바라던 동맹재편의 모든 요구조건을 세계 어느 동맹국보다 가장 먼저,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는 결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대북교류협력의 병행추진’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북핵우선 해결에 경도되었다. 그리고 북핵문제 우선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용한 각종 정치군사적 대미협력과 군비증강은 역설적으로 대북포용정책 이행의 환경을 제약하고 옥죄어 갔다.

노무현 정부는 실용과 현실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의 바다 위를 좌표 없이 떠돌다 패권과 군사주의라는 암초에 좌초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는 도구주의와 예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근시안의 외교였다. 북핵 해결을 말하면서도 세계의 핵, 특히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침묵하

는 예외주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이중기준, 동북아 균형자를 말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허브기지를 제공하는 자기모순, 주변국의 군사력 형성은 위험하고 남한의 군사력 형성은 불가피하며 북의 미사일은 위협이 되어도 한국의 첨단군사력은 북을 위협할리 없다는 자의적 판단 등이 그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그릇된 현실주의와 특유의 공학적 접근은 정책결정의 비밀주의와 독단적 추진을 일상화했다. 이라크 파병, 전략적 유연성, 대북식량지원 중단,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를 자임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중대한 전략적 선택들은 하나같이 민주적 의견 수렴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결하고 있다. 이같은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정책추진 결과 자체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2000년 전후 한국사회에 존재했던 역동적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한미FTA는 그 결정판이다. 한미FTA에 이르러 노무현 정부의 독단은 일상의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삶 전반에 대한 공격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 점에서 노무현 정부에 와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옳다.

2004년 이후 한국사회의 참여민주주의적 역동성은 보수의 세력화만이 아니라 참여민주주의를 자처한 정부의 공격에 의해 극적으로 쇠퇴하였다. 이것을 민주개혁 세력의 분열과 분화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본질은 민주주의의 빈곤, 민주개혁 내포의 빈곤, 한반도 비전의 빈곤이라고 말해야 옳다. 따라서 한계는 노무현 정부만이 아닌 시민사회 일반, '진보개혁 세력' 일반에도 존재한다.

분단냉전체제 아래서 성장한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은 사회공공성과 연대성이라는 면에서는 아직 발육 부진 상태에 있었고 국익의 논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안보의 논리에 대해 평화를 일관되게 발전시켜나갈 뒷심을 가지지 못했다.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은 전 국토에 나부끼는 "베트남 처녀 사세요"라는 플래카드 만큼이나 일천한 게 사실이다.

대테러전쟁 시대의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의 세계화' 앞에서 민주주의 문제, 평화의 문제, 권리의 문제를 국지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은 힘을 가질 수 없다. 협소한 국익의 경계를 넘어, 안보와 공포의 논리를 넘어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평화와 공존을 위한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사실 대테러 전쟁 시대에 민주주의는 한국만이 아니라 지구 전역에서 공격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에 걸친 지구적 수준의 저항은 '현실의 힘'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어 놓았다. 대테러전쟁 선포 이후 노골화된 미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패권정책에 단호히 반대한 시민사회와 정부를 가진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 기간동안 역동적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우리에게 없는 민주주의의 역동적 드라마가 그들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중동에서의 강력한 저항, 민주적 과정을 통한 남미 좌파 정부들의 등장, 미국 영국등 유럽에서의 강력한 반전운동, 환경, 여성, 노동운동은 패권국가의 대외정책과 국제관계와 규범을 수정키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교는 이러한 동학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우리 시민사회와 이들과의 연대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우리 시야의 한계와 역량의 한계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테러 전쟁은 냉전 해체로 이완된 세계를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을 통해 재편하고 지배하려는 의도로 고안되었으며, 이는 각 국가의 민주주의와 평화지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둘째, 대테러 전쟁이 새로운 지배질서를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전 세계의 사회적 운동은 단순한 반전운동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와 연대의 질서를 지향하고 있다. 셋째, 남한의 국가와 시민사회는 국가안보 혹은 국익으로 명명된 주제에 관한 한 자신의 민주적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현저히 부족한 기형적인 저성장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모든 나라에 일반적이지만 특히 남한은 냉전과 분단의 후과가 크다. 넷째, ‘안보’에 취약한 이러한 발육부진은 남한의 민주발전에 중대한 병목 지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주변국-예컨대 이라크와 이란,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매우 공격적인 결과마저도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특히 남한 민주주의와 평화주의의 저성장은 북의 군사주의, 미국의 패권주의와 더불어 한반도 분단극복 과정을 매우 비극적인 과정으로 인도할 수 있다.

### 3. 2007년 사회운동 : 공공성과 평화를 위한 연대

김선혁 박사의 주장대로 문제는 역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정치세력화’도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나는 민주주의의 정치세력화를 말하기 전에 시민사회 내에서 민주주의와 평화국가를 향한 지향과 운동의 형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다. 사회적 지향과 비전, 구체적 요구와 운동의 형성이 전제될 때 민주주의의 결집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대테러 전쟁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취약고리인 국익과 안보의 물신화가 더욱 부추겨지는 조건에서 이에 대한 응전을 지식사회와 삶의 현장, 그리고 대의제 정치 영역에서 본격화해야 한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주도성이다.

한국사회의 어떤 정치인과 정치 정당도, 어떤 정권도 모두 다 민주주의, 복지, 평화를 말한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복지와 양극화 해소를 말하고, 한나라당이 평화를 말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국익, 성장, 안보라는 공유된 인식의 틀, 게임의 공식을 공유하고 있다. 게다가 이 나라의 관료들은 위임받지 않은 범위에 대해 설계자임을 자처하고 그것을 비밀스럽게 추진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라고 숙단한다.

사회운동의 이의 제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익과 공공의 이익을 분리하여 과연 누구를 위한 어떤 이익인지 더욱 촘촘하게 따져야 한다. 국익과 위협 해석에 대한 국가안보 엘리트들의 독점에 도전하여 공동체의 안전, 이익, 평화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시민이 주도하여 마련해야 한다. 시장과 패권에 대해 맹목적 추종에 제동을 걸고 민주적 절차의 보완과 사회통합의 대안에 대한 논의를 더욱 본격화해야 한다. 관료책임 문제와 정책결정 참여확대는 결코 한물간 쟁점이 아니다. 60년 분단체제, 20년 민주화 국면이 넘어서지 못한 성역을 향해, 내외의 장애물들을 넘어 민주주의 운동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다방면의 노력을 전제로 2007년 집중해야 할 연대의 과제를 꼽는다면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한미 FTA의 저지,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이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한미FTA는 내용도 문제이지만 추진 과정과 방식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졸속적인 한미FTA 추진을 강행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투자, 참여민주주의와 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 맹목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이른바 '빅딜'을 통해서 무리한 최종타결을 시도할 경우, 각계각층의 거국적인 반대 운동을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는 국익과 시장의 이름으로 진행될 장기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이다. 한미FTA 저지운동은 특정 사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넘어 남한의 사회경제적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토론과 연결되어야 하며 연결될 수밖에 없다. 혹여 민주주의의 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면 이 운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6자 회담은 여전히 냉탕과 온탕을 오갈 수 있지만 더 이상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지향이 여기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5년간의 후퇴와 답보, 새로운 군사동맹 질서로의 편입에을 반복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요구하고, 평화국가로의 지향과 선택을 분명히 하는 시민주도의 운동이 필요하다. 화해협력 인도지원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옹호하고, 한미 동맹의 공격적 재편에 반대하여 한반도 전체의 비핵군축을 추구하고, 지구적 범위의 대테러 전쟁 협력에 거부하는 시민의 의지가 행동화되어야 한다.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의 김광일 씨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반전운동진영이 전개한 Vote for Peace 운동을 내게 소개해 주었다. 남한 정치 현실에서 동일한 운동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자구적 운동이자 정책요구 운동으로서의 'Act for Peace'는 실현가능한 연대운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이 시도가 민족공조운동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평화국가로 나아가는 시민사회의 시야는 남한 내부에 머물러서도 안되지만 민족이라는 배타적 인식틀에 갇혀있어서도 안된다. 남한과 북한, 미국과 동북아시아 정부들의 군사주의와 국가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민의 평화선언, 국경을 초월한 평화 호소일 때 이 운동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Ⅱ. 6자회담 성공하려면 군축논의 시작해야<sup>10)</sup>

분단 한반도에서 군축은 이상적인 주장처럼 여겨져 왔다. 더구나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군축하자는 주장은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북의 핵 실험이야말로 한반도에서 군축이 절실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군축에 대한 고려 없이 6자회담의 성공이나 북한 핵의 포기를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주변에 차고 넘치는 무기와 군대, 그리고 군사훈련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를 시작해야 할 때다.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래 급격히 고조되었던 한반도 주변의 긴장과 갈등은 불안전나바 합의된 수습국면을 맞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6자회담의 당사자들은 2.13 합의를 통해 2005년 9.19 성명을 이행할 수 있는 초기조치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된 것은 초기조치일 뿐이고, 아직 많은 쟁점들이 향후 논의일정에 따라 다루어지도록 남겨져 있다. 각 나라가 취할 ‘행동’의 의미와 수준도 이후의 논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터이다.

모처럼 마련된 해결의 실마리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북에게 핵을 포기시키려 할 때, 우리가 보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에너지의 지원과 소극적 안전 보장(불가침), 종전선언, 관계정상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북이 줄기차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요구사항’이 있다. ‘군사훈련 중단’이 그것이다. 1993-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도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했었고,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은 후에야 제네바 합의에 도장을 찍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의 베를린 접촉에서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었고 2.13조치 합의 과정에서도 이를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진행하는 RSOI훈련(한미전시증원연습) 및 FE훈련(독수리 훈련, 한미기동훈련)시점과 6자회담 실무그룹 협의일정이 3월 중순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군사훈련 문제가 초기단계 논의에 복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 문제가 우리 시야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아마도 한미간의 군사훈련이 북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와 군사훈련은 과연 북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일까?

RSOI 훈련에는 악명높은 F-117 스텔스 전폭기 편대와 핵 추진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 등이 동원된다. 또한 언제든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유도무기들이 배치되고 스트라이커 부대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병참이 지원 전개된다. 훈련은 고약하게도 DMZ 코앞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훈련이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표로 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7과 연관된 훈련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 양국군은 작전계획 5027 등이 북의 공격을 대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공공연히 견지하고 있는 ‘예방적 (핵)선제공격 독트린’만 살펴보더라도 ‘방어적 임무’와 ‘공격 임무’가 얼마나 애매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10) 창비논평 2007년 2월 27일자로 발표될 글입니다. 아직 미발표 상태이므로 창비논평에 발표되기 전까지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01년말 미국 의회가 채택한 핵태세보고서(NPR)은 북한 등 7개국을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2001년을 계기로 구체화된 미국의 새로운 핵 전략이 냉전시대의 그것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도 핵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 핵확산 방지 협정인 NPT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핵보유국의 비핵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이라는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북한이나 이란이 아닌 미국이 국제핵확산의 주범으로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친 김에 한국과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대북절대역지’ 개념에 대해서도 점검해보자. ‘절대역지’란 야구식으로 표현하면 ‘완봉승’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자면 안타를 하나도 치지 못하고 완패를 당하는 꼴이다. 야구의 경우 완봉패를 당하더라도 1:0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지는 일도 가능하지만, 전방과 후방이 따로없는 현대전에서 완봉패를 당하는 것은 변변한 공격도 못한 채 전후방이 초토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절대역지 개념은 더 이상 방어적인 억제개념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공격적인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한미 연합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에서의 압도적 대북 우위, 그리고 이를 활용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작전계획과 군사훈련은 북을 좌절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북의 군사적 불안감을 고취시켜 북의 군부로 하여금 ‘싸고 파괴력 있는 무기’ 즉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집착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야기해왔다. 북의 핵 위협 축소와 한미동맹의 핵 위협 및 재래식 군사위협 축소는 사실 하나의 의제인 셈이다. 이것이 한반도 핵위기의 본질이다. 따라서 이제 ‘북핵해결을 위한 논의’는 한반도 군축을 위한 논의와 연결되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 핵의 폐기 일정이 구체화되는 것에 조용하여 군비통제와 축소를 가능케 할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6자회담 의제의 하나로 ‘평화체제 문제’가 다루어질 예정이지만, 논의가 피상적인 문서상의 작업에 한정된다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북은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어떤 보상의 약속보다도 우선하여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를 집요하게 주장해왔었고, 평화체제 논의에 있어서도 북한은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2.13합의에 따른 초기이행조치의 성공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두차례 남북간 무장충돌의 대상이 되었던 NLL(북방한계선)의 재정의도 시도해 볼직하다.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북한 핵의 폐기가 본격화되는 2단계, 3단계 과정으로 진입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의 핵우산 정책과 공격적인 재래식 군사작전교리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실질적인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실질적 군사정책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전선언이나 불가침 약속이 진지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지 않으면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단기간에 타협하기 힘든 쟁점이 불거질 수도 있다. 북이 주한미군의 주둔도 용인할 수 있다고 언급한 시기는 ‘대테러전쟁’ 이전 시기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핵 해결 전후로 남한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이다. 남한은 이미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에 기초하여 매년 북의 10배 가까운 군비를 투자하고 있다. 과거 군축 논의는 남북간 신뢰구축 혹은 관계개선 이후에나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이미 남북간 재래식 군사력 균형이 깨어진 조건에서 남북 관계는 남한의 능동적인 군사적 긴장 해소 노력 여부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절대억지 개념은 폐기되어야 하며 군비는 '합리적 충분 전력' 수준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한반도 군축논의는 한미동맹의 민주화와 연결되어야 한다. 동맹의 민주화는 특히 '대테러전쟁'을 선포한 이래 지구촌 곳곳에서 무장갈등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주의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반환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원하고 한미 군사동맹의 전세계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군축을 주도하고 주변국과 협력적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군사동맹과 군비확장이 또 다른 군사적 대응을 부르는 군비경쟁의 딜레마, 안보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우리 스스로 군비경쟁의 한 당사자이며, 상대방에 대한 위협의 장본인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설계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선택 못지않게 남한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과연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가?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위협'에 대한 우리 안의 이중기준을 바로잡아야 하며, '평화군축'이라는 좁지만 유일한 길을 향해 지금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 Ⅲ.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평가 및 2007년 활동방향<sup>11)</sup>

#### 1. 2006년 정세 평가

##### 1) 국제 : 패권주의의 위기 심화, 무장갈등의 격화

###### ○ 미 패권주의의 위기 심화

- 이라크 정세의 악화
- 팔레스타인, 레바논에서 저항의 본격화, 저항세력의 다수화(민주주의 확산론의 종언)
- 이른바 '시아벨트'의 가시화
- 미영 반전운동의 고양, 부시 중간선거 패배
- ISG 그룹, 시리아 이란과의 협력, 주이라크미군 재배치 요구
- 유럽, 남미 좌파정부 집권 도미노

###### ○ 무장갈등의 격화

- 이라크 내전 가능성
- 미국의 암묵적 동의 하의 후세인 처형
- 미 부시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이후 이라크 증파, 이란 외교관 피랍 등 확전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임.
- 레바논 공습과 더불어 시아벨트 전체로의 무장갈등의 확산 조짐
- 호주, 프랑스 등에서의 아랍계 저항 --> 폭동

##### 2) 한반도 & 남한 : 안보담론의 강화와 군사화

###### ○ 북한 핵 실험과 6자회담 재개

- 9.19 성명 직후의 대북금융제재로 교착된 6자회담은 결국 북한 핵실험으로까지 이어짐
- 미사일,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통과 --> 제재국면
- 2월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어 북한 핵실험 빌미로 한미동맹, 미일동맹 공세화
- 12월 6자회담 재개 이후, 북미 양자접촉을 거쳐 북핵동결-보상 초기단계 타결 가능성
- 그러나 미국의 대중동정책이 변화하지 않고 있고 더욱 공세화 되는 등의 조건을 볼 때, 한반도 핵 문제는 위기관리 차원까지만 진전된 후 교착될 가능성도 있음

###### ○ 안보담론의 강화와 군사화

- 한미FTA추진, 전략적 유연성 인정 등 정권 차원의 자발적 대미접근
- 5월 평택 대추리 군부대 투입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투입
- 북한 핵실험 이후 '핵우산 요구' '대북봉쇄론', '전쟁불사론' 등 호전적 군사주의 담론 강화

11) 2007. 1. 29 파병반대국민행동 내부평가 회의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등 보수 안보담론의 공격 강화
- 한국형 MD추진 본격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본격화
- 이라크 파병연장, 레바논 파병 결정 (이라크는 6월까지 철군계획 작성 단서조항. 그러나 정부는 연말 기입인 이라크 진출 허용, 자이툰부대는 이미 PRT 경호임무 등 새로운 임무 시작. 이는 장기주둔 포석으로 보임)
- 테러자금조달억제법 1월 차관회의 통과

cf.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당선

- 비판적인 코피 아난 대신 친미적 사무총장 기용 구상의 카드
- 국내적으로는 국제사회 기여라는 이름으로 친미적 대외정책, 특히 대테러전쟁에 대한 협력 강화의 계기로 작용할 듯 (PKO법 추진 등)
- 반면 국제평화를 위한 기여나 국제규범 준수 등 유엔의 평화인권 규범에 대한 국내 호소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계기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음.

## 2. 활동 평가

### 1) 2006 파병반대운동의 목표와 기초에 대한 평가

#### ○ 연내철수 운동

- 국내외 정세를 볼 때 목표설정 자체는 타당했음.
- 그러나 집중할만한 동력에 대한 우려는 역시 현실로 나타났음.
- 5월부터 완전철수 운동을 시작하자는 계획은 6월 레바논 공습 등으로 한정된 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실행에 옮겨지지 못함
- 10월 북한핵실험은 막판의 효과적 집중을 어렵게 하는 계기로 작용.
- 레바논 공습과 정부 파병방침 등으로 레바논 파병 반대를 활동 목표에 추가

#### ○ 운동의 접합 혹은 전략적 연대

- 한미FTA, 평택-전략적 유연성,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등을 패권추종에 대한 저항이라는 맥락에서 연결하고 힘을 모으려 하였음.
- 그러나 각 운동의 구체적 현안을 다룸에 있어서도 힘이 부쳤음. 한미 FTA의 복잡성과 이슈의 전문성, 평택 현장 투쟁의 시급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연대는 불가능했음.

### 2) 주요 활동에 대한 평가

#### ○ 집회 및 대중활동

- 3.20, 6월, 9월, 11월, 12월 집회 등의 집중집회는 나름대로 악조건에서 최소한의 역량을 모아냈다는 의미에서 성공적. 그러나 철수를 이끌어낼만한 대중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든 여건이었음.
- 11월 신디시옌의 방한 등 시의적절한 문제제기, 한정된 역량으로 효과 극대화

- 레바논 공습을 계기로 경계를 넘어 등 레바논 모니터 평화단체들과 연대운동에서 매끄럽지 못해 연대효과 저하

○ 정책활동 및 원내 협력

- 미국 분기별 보고서 소개 등 모니터보고서로 파병군 철수 당위성 제시, 정책적 우위 주도
- 여당 '철군계획' 당론 유도 등 원내협력에서 부분적 성과 도출, 그러나 정부차원의 1년 연장 입장이 굳어진 조건에서 철군계획 제출을 강제해내는 데는 한계
- 레바논 파병안 저지는 최소한의 문제제기를 했으나 파병저지는 물론 원내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역부족.

○ 조직적 측면

- 최근 수년간의 연대기구 결합단위의 축소 위축현상 뚜렷
- FTA, 평택 등으로 반전평화 관련 계기적 역량 집중에도 한계
- 각계 선언 등도 다른 이슈들 -북 제재반대, FTA, 평택, 비정규직 등에서의 빈번한 중첩을 피하기 위해 시도하지 않음
- 전체로서 파병반대국민행동 조직역량의 위축과 소수화가 심화

3. 2007년 정세

1) 국제 정세 포인트

- 이라크 상황 악화 가능성
- 미국 민주당 주도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상황악화를 빌미로 증파 등 극단적 군사정책을 강행할 가능성 높음
- 이란으로의 확산 가능성 및 레바논 무장갈등 재연 가능성 상존
- 미국내 정치갈등이 한층 격렬해 질 수 있음.
- 이라크 내전 확대 시 쿠르드 지역-이란접경 지역 주둔 자이툰 부대의 무장갈등 연루 가능성 상존 (기업인 진출 허용도 악재로 될 수 있음)
- 레바논 사태 악화 시 현 한국군 파병지는 무장갈등의 최전선이 될 수 있음

2) 국내 정세 포인트

- 북한핵을 둘러싼 논란은 냉탕 온탕을 반복 : 북한 2차핵실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국면적인 해빙이 예상되고 남북 당국관계도 냉탕 온탕을 반복할 수 있음.(정상회담???)
- 개헌, 한미FTA타결 등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대결의 격화
- 대선 정치쟁점으로 수렴
- 대선 전후 정계개편 예상됨.

#### 4. 2007년의 활동 방향

##### 1) 활동 목표와 방향

###### ○ 목표

- 이라크 파병군, 아프간 파병군 완전 철수
- 레바논 파병의 문제점 여론화
- PKO법 저지
- 반전평화연대의 실현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국민적 연대

###### ○ 방향

- 대선과 연결되는 반전평화 연대세력의 형성 : ACT FOR PEACE
- 이라크 완전 철수를 위한 행동 강화(정책대응 강화 및 효과적 대중 역량 집중)
- 레바논 정세 및 정부정책 모니터 강화
- 현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유지하되 유연한 사안별 연대의 활용

##### 2) 검토할만한 주요 계획

###### ○ 3.20 등 주요 집회

- 3.20 전후 이라크 연내철수 레바논 파병반대
- 5월말 6월 초 중 철군 계획 촉구 집중 집회
- 9월 중 연내 철군 집회

###### ○ 파병관련 정책적 대응

- 레바논 파병 정책 방향 질의와 모니터(3월)
- 이라크 철군계획 및 정세평가 질의와 모니터 (5월)
- PKO법 모니터 (2월 국회 이후)
-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입장 질의 (7월 이후)

###### ○ ‘Act for Peace?’

- 반전 평화, 한반도 평화 추구 세력의 대선 프로젝트